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심화하고 있는
위기와 불안정

▶ 8~9면

제국주의
왜 반제국주의
관점과 운동이 중요한가

▶ 4, 5면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11면

인민전선의 역사적 경험 연재 ③
1936년
스페인이 겪은 비극

▶ 12면

오바마의 위기
기대가 어떻게 배신감으로
바뀌었는가

▶ 10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미디 이송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주)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53

Left21.com

2011년 1월 8일 ~ 1월 21일 | 제48호 | 값 1,800원

리포트21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순자산 중 상위 10퍼센트가 차지하는 비중

47.2%

새해 벽두에 연 첫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은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복지 확대 요구에 어깃장을 놓았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 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진보진영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요구가 국민적 지지를 받아 민주당도 말로나마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박근혜조차 ‘한국형 복지’를 내세운 상황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복지 위기론’은 아주 간단한 사실들만 살펴봐도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난다.

이명박은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했는데 현재, 이 나라의 국가 재정이 부족해진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자신이 기업주·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줬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깎아 준 세금만 다시 거둬도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당장 시행할 수 있다.

더구나 2010년 상반기 상장기업 5백52곳의 잉여금만해도 무려 3백38조 5천4백43억 원이었다. <<연합뉴스> 2010년 9월 5일>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지출을 따라잡는 데 추가로 필요한 연간 재정 1백10조 원의 세 공급이다. 이런 재벌·대기업들에게 세금까지 깎아 주고는 이제 와서 ‘한정된 국가 재정’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가.

복지 확대가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는 얘기도 거짓 말이다.

“많은 나라”를 볼 것도 없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스웨덴은 이번 경제 위기에서도 가장 잘 버텨 낸 나라 중 하나였다. 반대로 가장 복지가 형편없는 미국이 이번 경제 위기의 진원지였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를 두고 ‘과도한’ 복지를 문제 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복지가 형편없고 노동시간이 긴 나라 중 하나였다.

오히려 “그리스 위기의 근본적 요인으로는 유로가 입으로 인해 야기된 취약한 거시경제 환경에서 우파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정책을 들 수 있다.”(정세은 중남대 교수)

아일랜드의 재정 파탄도 금융 자본들의 투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보수 언론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이다.

복지 확대가 아니라 한미FTA, 부동산 투기 규제 완화, 감세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이런 나라들의 위기를 낳은 정책과 닮은 꼴이다.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는 슬그머니 자기를 연봉은 인상시켰다. 대통령 연봉은 총 2억 1천9백5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 원가량 인상했고, 국무총리도 1억 6천1백4만 1천 원으로 8백만 원 올랐고, 장관들도 6백만 원씩 인상했다.

결국 복지 확대가 위협하는 것은 ‘국가 재정’이나 나라의 장래가 아니라 재벌·대기업·부자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득권일 뿐이다.

▶ 3면으로 이어짐

순자산 중 하위 50퍼센트가 차지하는 비중

8.9%

순자산 중 하위 10퍼센트가 차지하는 비중

-0.5%



☞ 세상은 요지경

“한국은 도자기 가게에서 취권을 하는 무사와 같다. 취한 척 연기하고 있는지 정말로 취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한국 정부의 강경책을 비교는 중국 <환구시보>

“2010년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비노조 경영철학을 신념화한다”

삼성 '비전 2020년 달성을 위한 임직원 특별 교육 실시'

“소통 부족이라고들 말하지만 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왔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통계를 한 번 뽑아 보라”

불통이 아니라고 우기는 이명박

“우리가 믿고 따라온 길을 되돌아 보며 ‘오메, 이 길이 아니었나벼!’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한나라당 정두언

“부산에 가면 폭력조직 칠성파가 있고 광주에 가면 OB파가 있는데 우리가 포항에 ‘형제파’라는 조직이 있었다는 걸 놓쳤다. 형제파가 대한민국을 접수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대한민국을 거덜 내고 있다”

이명박·이상득 형제를 꼬집는 명진 스님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구지역 확산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나라당 대변인 안형환

“그렇다면 <1박2일>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안형환의 궤변을 비교는 방승민 손석희

“내가 ‘안녕하세요. 보은병 안상수입니다’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다들 난리가 났다. 옆 사람을 치고 웃으면서 죽더라 죽어”

보은병 사건이 자랑스러운 안상수

“안상수가 매번 큰 건을 터뜨리니 허경영 씨의 위치가 위태로워 보인다”

네티즌들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을 재촉해 온 경쟁 논리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다국적 석유 기업과 그들의 후원을 받는 소수의 과학자들을 제외하면) 상식이지만, 여전히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징후들을 비전문가들의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왔다.

매일매일의 날씨를 다루는 기상과 달리 기후는 30년 이상의 통계적 추세를 다루기 때문이다. 기상이변 한 번만으로는 그것이 기후변화의 영향인지 아니면 대기의 일시적인 요란현상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갖가지 시간변화 그래프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증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다. 빙하가 녹는 사진들은 직관적이기는 했지만 기후변화가 먼 나라의 문제라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2010년은 특별한 해였다. '기후변화 종합 재해 세트'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상기후 현상들이 한국에서 1년 내내 지속적이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상청과 녹색성장위원회는 2010년 국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이상기후 현상들을 정리해 《2010 이상기후 특별보고서》를 발간했다.

2010년 첫 출근이었을 1월 4일에 관측 이래 최대 폭설이 내려서 서울의 교통 체계는 사실상 마비됐다. 당일 폭설뿐만 아니라 2009년 말~2010년 초 전체가 25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었다. (2010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찾아온 30년 만의 강추위는 제외한 것임).

2010년 3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는 역대 1위의 이상저온 현상과 일조량 부족이 지속됐는데 그 결과 가을에 배추값이 폭등했다.

여름에는 열대야가 평년보다 2배 이상 이었는데(지난 10년 중 최다였다.) 낮에도 평년보다 폭염이 오래 지속됐다.

추석 연휴인 9월 말 서울에 내린 폭우는 1백2년 만에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서울시 빗물펌프장의 설계 용량보다 비가 많이 내려서 결국 광화문 사거리까지 물에 잠겼다. 이 밖에도 짧은 기간에 집중된 태풍과 역대 최고였던 가을황사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도 지난해 못지 않은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글자 그대로 '눈에 띄도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명박



사진제공: (왼쪽부터) 연합뉴스

2010년 1월 4일에 관측 이래 최대 폭설이 내렸다. 기후 변화는 최근 '눈에 띄도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 지난해 12월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는 언론에서조차 그 '존재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배출권 거래제

이명박 정부는 배출권의 90퍼센트를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한 어처구니없는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통과시켰겠다고 버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의 진정한 목적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진짜 조치들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2008년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에서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는데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증가 속도마저 1990년대보다 빠른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의 UN 온실가스 감시 보고서는 과거 수년 동안 정체돼 있던 메탄가스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기온이 따뜻해지고 강수가 많아져 때문에 북극의 습지와 열대우림에서 메탄가스 배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의 결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기후변화 가속 현상은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다.

체제가 뿌리박고 있는 생태계의 안정보다 자본가들의 이윤이 중요시되는 현상은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달을 저해하는 모순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자본가들은 기후변화를 몰라서가 아니라 경쟁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없다. 기후변화 파국을 막기 위한 운동이 반자본주의의 운동으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다.

김종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폴라주 ④3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자본이시여!
미디어를 바치나니
이 독재자를 구원하사
신묘년, 잘 토끼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투전

무기가 아니라 복지가 필요하다

연평도 상호포격 이후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핵 항공모함을 만들 계획이고, 일본도 대 중국 군사력을 높이려고 잠수함과 미사일을 대거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는 무려 7백40조 원을 들여 군대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도 2011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가량 늘려 31조 4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것도 모자라 국방부는 2015년까지 국방예산을 40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대량 살상무기를 늘리고 있다.

이미 연평도에는 집속탄을 사용하는 다연장 로켓포가 추가로 설치됐다. 집속탄은 큰 폭탄 하나에 5백여 개에 이르는 작은 폭탄이 들어 있다. 집속탄을 한꺼번에 쏘아대는 다연장 로켓포는 축구장 12배 면적에 수류탄 6천여 개를 떨어뜨린다. 그 잔혹함 때문에 1백8개 국가가 집속탄 금지협약에 서명했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무기에 정부는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책정했다.

K-9 자주포와 한 대에 1천억 원이나



사진제공: 연합뉴스

자본가들의 정신나간 우선순위는 사람을 살릴 돈을 빼내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쓴다.

하는 F-15K 전투기를 구입하는 데도 1조 4천억 원을 쓸 계획이다.

한 해 쓰이는 군비 30조 원이면 대학 무상교육과 전국민 무상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돈이 왜 군비에 쓰여야 하는가?

게다가 정부는 군비를 늘리면서 복지에 산은 인정사정없이 삭감했다.

밥을 굶는 아이가 1백만 명에 이르는데

도 결식아동 예산 2백8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대학 등록금과 장학금 지원 예산 3천 7백억 원을 삭감해 그동안 장학금을 지원받던 차상위 소득층 학생 5만여 명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됐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3백30억 원, 보육 지원비와 독거노인·장애인·빈곤층 지원비 등도 삭감했

다. F-15K 전투기 몇 대만 사지 않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학기마다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고, 반지하 방에서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 켜고 자다 불에 타 죽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군비를 늘리느라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배자들의 정신나간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군비 증강은 다른 나라를 자극해 동아시아 불안정을 더 키울 뿐이다.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미 남한은 세계 3위 무기 수입국이다. 남한의 국방비는 이미 북한 GDP를 넘어섰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9배가 넘었다.

반면 이명박 집권 기간에 대북지원액은 1백40억 원밖에 안 됐다. 군비를 늘리는데 쓸 돈을 북한 민중의 굶주림과 고통을 해결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긴장을 부추기는 군비가 아니라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

정선영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르르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롯데백화점 맞은편 명동 입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복지 확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이명박

» 1면에서 이어짐

한편, 지난 12월 30일 영국 노동연금부가 “현재 영국 인구의 17퍼센트 정도는 수명이 1백 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동연금부 장관 스티브 웹은 “이것이 우리가 연금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노인들이 더 오래 살게 됐으니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의 5분의 1 가까이가 1백 세 이상 살 것이라는 이 발표가 얼마나 사실 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노동자들이 장수하게 됐다는 사실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만큼은 분명하다.

고령화

이 연구 자체가 연금 삭감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기획됐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에 2008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 영국인의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복지 삭감을 위한 이 논리는 나을 만에 지구 반대쪽까지 날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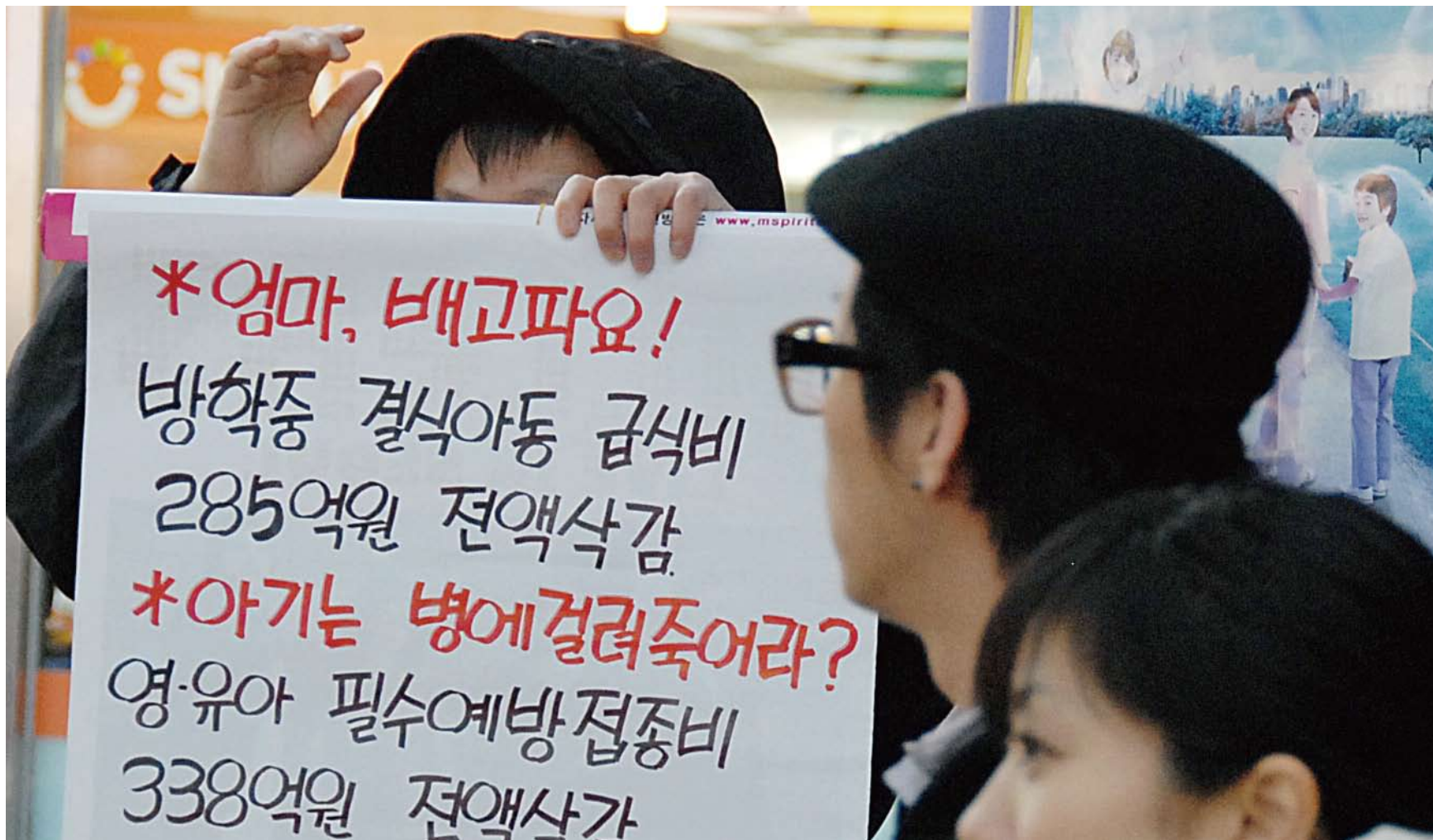
발표가 난 지 나흘 만에 이명박 정부가 “1백 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하며 복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나섰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삭감 계획을 몰래 추진하던 사실이 폭로돼 대중적 반발을 사자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실질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영국 정부의 삭감 계획이 성공할 경우에 영국 노동자들이 받게 될 연금에도 한참 모자라는데 덩달아 연금 삭감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영국 같은 무상의료 제도도 없는 이 나라에서 쥐꼬리 만한 연금마저 깎으려는 것은 더욱 악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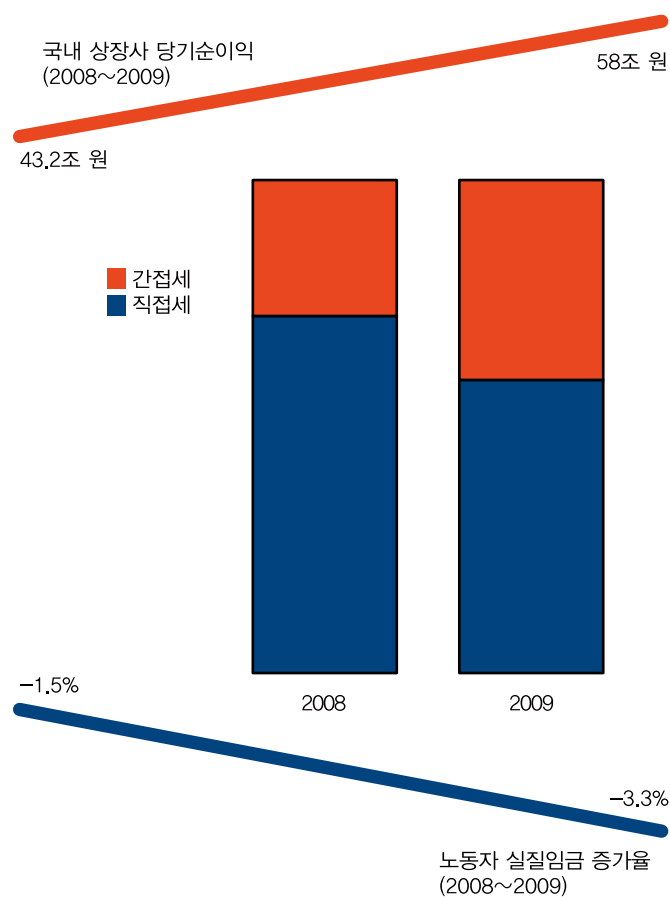
기대 수명이 늘어나 복지 지출이 늘면 그 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기대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경제도 성장하고 복지 지출도 늘어났다.

고령화를 빌미로 한 이명박 정부의 복지 삭감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장호중



이명박은 “친서민”하겠다고 한 지 1년 만에 “한국이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고, 그 말을 한 지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복지 포퓰리즘”이 위험하다고 한다. 속도전의 대가답다.



사회투자국가론과 박근혜·민주당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 발표에 “재원 마련 방안을 비롯해 아무 내용이 없다”는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심재철조차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그 얘기는 감추고 무조건 복지만 잘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한국형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얘기들은 전임 정부들이 추진하던 ‘사회투자국가’의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론은 영국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이 신자유주의에 투항하면서 만들어낸 ‘제3의 길’ 노선의 결과물이다.

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복지 지출이 단순히 지출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투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주들이 보기에 복지를 쏟아부어 봐야 거기서 얻을 게 별로 없는 노인 복지(연금, 무상의료)가 첫째 공격 대상이 된다.

또 교육이나 여성에 대한 복지 지출도 그것이 믿을 만한 투자가 되려면 “무차별적”으로 살포하

는 방식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쟁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다른 하나는 투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리저리러한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수레나 그 수레나 ...

기존에 보편적 복지 체계를 갖고 있던 유럽의 복지 국가들에서 사회투자국가론은 어떤 식으로든 복지 지출 총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노동자들은 기존에 받던 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 더 번거롭고 힘든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일부에서는 급여 자체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사회투자국가론에 기반한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는 복지 확대를 바라는 대중의 기대 수준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도 믿기 어렵다.

재원 마련 계획도 없고, 투자의 관점에서 복지에 접근하는 것도 박근혜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박근혜의 복지론을 “철학, 비전, 대안이 없는 빈 수레”라고 비판하자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는 “그 수레나 그 수레나 비슷한 수레들”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복지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처럼 대중의 불만이 크고 요구 수준이 높을 때 이런 생각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지지를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지 확대 시도는 결국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기업주·부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민주당이 그들의 이익을 거슬러 부자 증세에 나서기는 어렵다.

결국 1987년 이후 한국 복지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지금 저들이 내뿜고 있는 복지 미사여구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투쟁이 뒷받침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장호중

새로 나왔습니다

마르크스21

8호(2010년 겨울)

가격: 16,000원

구독 문의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특집 지금의 이슈들

3대 세습 북한은 어디로?
- 북한 권력 세습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망 _ 김하영

금융세계화론 비판 _ 강동훈

진보 교육감 탄생과 교육운동의 쟁점 _ 정진희

긴축의 정치학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2년 120,000원
3년 180,000원	5년 300,000원
7년 420,000원	10년 600,000원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현대 진보사상 조류

니코스 폴란차스의 정치 이론 비판 _ 콜린 버커

서평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결정적 한 가지 _ 정종남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모든 병환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 _ 장호중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사태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무의미한 예측 _ 찰리 호어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시장을 떠나서 학교를 살리자! _ 김성보
《제 계바라, 혁명적 인간》
신화에서 걸어나온 인간 계바라 _ 한수영
《이미지 - 시각과 미디어》
프레임의 안과 밖을 모두 보는 법 _ 최윤진

논쟁 어떤 전략과 전술인가?

전략과 전술의 기초 _ 최일봉

진보대통합 논의에 부쳐 _ 김인식

새 상설연대체 - 한국진보연대의 재판再版이 될 것인가? _ 최영준

해방정국의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전선 _ 한규한

코민테른에 제출한 트로츠키의 공동전선 테제 _ 트로츠키

세계적 불안정의 원인 — 제국주의

김용욱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몸소 느꼈다. 많은 이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뉴스에서 보던 끔찍한 불행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주류 언론들은 밤낮으로 전문가를 동원해 해설 보도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북한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강한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레프트21>이 반복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그런 대안은 더 큰 재앙을 낳을 뿐이다.

사실, 어떤 나라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군비 확장으로 대응하고 이것이 다른 나라의 군비 확장을 낳고, 그것이 또 다른 나라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1백 년 넘게 현대 세계 체제의 근본적 특징이었다.

그러나 현대사 책을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듯이 군사 경쟁은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1·2차 세계대전, 냉전, 1990년대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등 크고 작은 전쟁과 불안정을 낳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각 나라들은 군사 경쟁으로 내몰리는가?

경쟁 – 자본주의의 알파요 오메가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적 성격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경쟁은 시장에서 기업들의 가격 경쟁뿐 아니라 나라 간 경쟁으로 표현된다.

20세기 초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런 경쟁 체제를 제국주의라고 불렀다. 이 단어는 흔히 강대국의 약소국 억압과 식민 지배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더 폭넓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뜻하는 것이며 이 체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여전히 그대로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와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성공적인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자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한동안 기업 활동에서 국경과 '모국'이란 개념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세계화론'이 유행하면서 국가와 자본의 밀접한 관계가 더는 체제의 근본 성격이 아니라는 사고가 팽배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론자들의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2000년대 미국 부시 정부와 네오콘이 중동 석유를 통제하려고 벌인 전쟁들에서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이 자국 자본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세계 5백대 기업들은 자신의 출신 국가가 있는 특정 지역(북미, 유럽, 동아시아가 가장 중요한 세 축이다)에, 특히 자기 출신국에 집중적으로(총 투자의 70퍼센트 이상) 투자한다.

이것은 기업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국가 권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교육 체제, 도로와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원료와 자원의 원활한 공급 등은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국가들은 세계시장에서 자국 자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종종 국가 관료들은 직접 기업 '영업 활동'에 뛰어들기도 한다.

예컨대, 최근 위키리크스는 미국 외교관들이 미국의 대표적 제조업 기업인 보잉사의 항공기를 팔아먹기 위해 해외에서 '보따리 장사'를 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미국무부 경제부문 국장 로버트 호메츠는 '이것이 21세기의 현실이다. 정부들은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더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적 경쟁

둘째, 국가가 자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개별 기업의 시장 경쟁을 보조하는 데 멈추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외교와 군사력도 강화해야 한다.

경제적 경쟁과 군사적 경쟁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예컨대, 2000년대 미국 부시 정부와 네오콘이 중동 석유를 통제하려고 벌인 전쟁들에서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이 자국 자본주의 경쟁력을 강화하



동아시아 제국주의 경쟁의 한 단면 미국을 목표로 중국이 개발 중인 신형 스텔스 전투기(위), 최근 대중국 시위용으로 동원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아래)

기 위해 군사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석유를 고리로 유럽·일본·중국 등의 경쟁국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라크인 수백만 명을 제물로 삼았다.

사실, 미국 제국주의가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활용한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로 등극하는 데서 군사력은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 지역이 미국 군사력의 보호 아래 있게 되면서 이들 나라들은 대공황 당시 지배적이던 폐쇄적 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미국의 투자와 상품에 문호를 활짝 개방했다.

미국의 한 급진적 학자가 당시 미국 제국주의를 '문호 개방 제국주의'라 부른 것은 이 점을 잘 지적한 것이었다.

반대로, 비슷한 시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폐쇄적 스탈린주의 체제는 문호 개방을 통한 시장 경쟁에서 미국이나 선진국과 경쟁하기엔 경쟁력이 너무 약한 일부 후진국들이 선택한 체제였다.

그러나 시장 가격 경쟁을 가로막았다

고 해서 그들이 자본주의 경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나라들은 경쟁 압력을 주로 국가들 간 군사적 경쟁 압력으로 경험했다.

이 나라들의 관료들은 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자원을 중공업에 쏟아부었다. 이 결정은 그 어떤 민주적 토론도 없이 집권세력이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었다. 따라서 혼한 오해와 달리 이 나라들은 모종의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관료들이 자본가 구실을 하며 중요한 결정을 독점하는 국가자본주의였을 뿐이다.

위계적 질서

그러나 국가들 간 충돌이 발생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는 그것이 1차대전 같은 열강들 간 전쟁인지 아니면 열강과 약소국 간 전쟁인지에 따라 다르다. 제국주의 경쟁은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다른 모든 경쟁과 마찬가지로 승자와 패자, 강자와 상대적 약자를 낳기 때문이

다. 제국주의 체제는 흡사 학교 성적처럼 위계서열이 대단히 명확하다.

물론 이 서열은 변한다. 20세기 초 영국은 최강대국 자리를 미국에 넘겨 줬다. 러시아는 20세기 중반 미국과 우열을 겨루던 세계적 강국에서 오늘날에는 지역 강국으로 전락했다. 또, 최근 중국의 부상은 다른 열강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는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소수의 열강이 있고, 다른 편에는 그 법칙에 호응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그것에서 배제됐기에 때때로 저항하는 다수의 중소국들이 있는 제국주의의 위계적 특징은 계속 유지돼 왔다.

오늘날 군사적 측면에서 위계는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과 북한이 갈등을 빚을 때 단순히 양비론적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전 세계 군비의 약 50퍼센트를 지출하고 3백여 개의 군사 기지를 전 세계에 촘촘히 배치한 미국과 최빈국인 북한 중 누가 오늘날 동아시아를 포함한 제국주의 경쟁 체제의 불안정에 더 큰 책임이 있고, 누구의 패배가 제국주의 경쟁 체제의 약화에 더 크게 기여할지 명백하기 때문이다.

현재 동아시아 불안정의 핵심은 미국 제국주의가 제국주의 서열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지역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북한 위협을 부추겨 지역 동맹들을 규합하고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데 있다. 북한 같은 소국이 세계적 열강들이 밀집한 이 지역의 안정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주류 언론의 인식은 현실과 거리가 한참 먼 것이다.

물론, 미국 제국주의의 대북 압박이 좌절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독재를 유지하며 핵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

여태까지의 논의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치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특징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 협정 등 국가들 사이의 타협으로 제국주의적 불안정과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일부 좌파들이 미국 제국주의의 대안으로 착각하는 중국도 자본주의 경쟁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진정한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하려면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간 연관 때문에 결국 반제국주의 운동은 자본주의에 맞서는 혁명적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동부 사회포럼 세계는 신냉전으로 가는가? — 오늘날의 제국주의

연사: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자)
일시: 1월 12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건국대 수의대 410호 강의실
참가비: 3천 원 (학생 1천5백 원)
문의: 02-447-0397

서울 서부 사회포럼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연사: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자)
일시: 1월 13일 (목) 오후 8시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CYC 4층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서울 남부 사회포럼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연사: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일시: 1월 20일 (목) 저녁 8시
장소: 윈스터디 강남2호점 (강남역 6번 출구 2백 미터 직진 티니위니 건물 10층)
참가비: 4천 원(학생 3천 원)
문의: 010-2401-1987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반란의 유럽 — 노동자·학생 투쟁과 급진 좌파

연사: 최웅찬(다함께 활동가, 독일 베를린 경제대학 '세계화와 노동정책' 석사과정 수료)
일시: 1월 2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해화역 4번 출구 3분거리, CGV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음료제공)
문의: 070-8113-8541, 010-8481-2626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경제

연사: 정성진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마르크스와 한국 경제> 저자)
일시: 2월 1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해화역 4번 출구 3분거리, CGV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음료제공)
문의: 070-8113-8541, 010-8481-2626

경기 남부 사회포럼 신자유주의의 대안 —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反)자본주의인가?

연사: 정종남 (다함께 활동가)
일시: 1월 14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역자골목 지나서 농협4거리 왼쪽 '토방' 건물)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663-0032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atgwestmail@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ibforum>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일관된 반제국주의 관점이 필요하다

최미진

연평도 주민들이 두 번이나 피난행렬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가 순식간에 군사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대청해전’부터 남북한 상호 포격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 한반도 긴장상태는 계속됐고, 남북교류는 말라붙다시피 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에는 9년 만에 인도적 대북지원이 ‘제로’로 떨어졌다. 금강산 관광은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 그래서 한반도 위기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됐다.

그러면 한반도 위기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 내 상당수가 6·15, 10·4 지지세력이 모여 이명박을 심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NGO와 자주계열 등 주요 개혁주의 세력들은 ‘10·4 선언’에 나온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약속 이행을 서해에서의 갈등 해결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 당국·강대국들 간 회담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결보다는 해빙이, 군사적 대결보다는 대화가 노동자·민중에게 더 낫다. 따라서 이런 요구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공감한다.

그런데 이런 요구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진정한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가령, 10·4 선언에는 “불가침 의무”,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적시돼 있지만, 1990년대 미국이 조성한 두 차례 한반도 전쟁 위기 속에서 빈말이 됐다. 게다가 북한 군사비를 압도하는 남한의 군축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도 NLL과 같은 민감한 군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경제협력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분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를 싼값에 착취하는 경험을 확대하라는 것이 과연 진보적 요구인가 하는 문제가 남을 뿐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한반도 상황에 따라 거듭 불안정해진 것을 보면 경험에 따라 거듭 불안정해진 것을 보면 경험이 평화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역시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히 묶여 있지만, 동시에 서로 상대를



12월 18일 전국민중대회 한반도 긴장고조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10·4선언 이행 요구에 그치지 말고 한반도 위기의 주범인 미국 제국주의와 한미 군사동맹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겨냥한 군비경쟁을 하며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의 근원인 미국 제국주의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대안의 커다란 약점이다.

핵심 고리

냉전 해체 이후에도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핵심적 원인은 바로 미국과 제국주의 국가들 간 경쟁에 있다. 미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잠재적 경쟁국들이 모여 있는 지역인 동아시아에서 패권 유지를 위한 개입의 빌미가 필요했고, 동아시아판 이라크로 북한을 지목해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북

한 핵 위협은 실질적이지 않았으나, 미국이 핵을 빌미로 북한을 압박하고부터 북한 핵 문제가 현실화됐다. 미국이 한반도 주변국 군비증강과 긴장 고조의 악순환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요 개혁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대안들은 미국 패권과 그 패권에 기대 성장하려는 남한 지배자들에 맞선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핵심 고리가 희미하다.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개입 반대, 한미군사동맹 폐기와 같은 핵심적 반제국주의 요구들을 일관되게 제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해 버렸다. 반대표를 던지면서 국회에서 반제국주

의 주장을 하고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드러낼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이다.

NGO의 경우,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관점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초기에 양비론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남북한 상호 포격 사건 직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성명 제목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했고, 내용도 북한 규탄에 기운 양비론이었다.

물론 북한의 행위를 결코 옹호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확대 시도가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결국 남북한 상호 포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한다.

민주대연합은 반제국주의도 흐리게 한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대북규탄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날, 민주당은 요란한 정권 비판과는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방예산 증액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남한이 경쟁력있는 지위를 점해야 하고, 그러려면 남한이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대북 정책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이명박과 민주당 사이에 어느 정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관해선 이전 두 정부도 이견이 없었다. 김대중은 북한

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노무현 정부도 팽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군화발로 짓밟았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손잡고 반MB연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 반제국주의 주장을 톤 다운해 민주당의 행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을 법하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대북규탄결의안에 기권하고, 민주당과 공동발표한 성명들에서 미국 비판이 빠진 것도 민주대연합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7·28 재보궐 선거 당시 광주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 반미”라고 민주노동당을 색깔론으로 공격했을 때조차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 당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해 포격 사건 이후에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민주당을 비판한 적이 없다.

독립적

사실 민주노동당의 자주계열 지도자들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 걸림돌이고,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가 남북한 상호 포격 이후에 발간한 《평화강좌》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고

그 이후에는 우파들의 호전적 선동에 반대해 남한 정부 비판에 강조점을 뒀지만, “군사적 대비태세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군의 의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성명)라거나 “[포사격] 훈련 중단이 북한에 대한 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도 이해 못할 바 아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성명)라는 부분은 일관성을 떨어뜨렸다.

12월 21일 6·15공동실천남측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가 야5당과 함께 발표한 포 사격 훈련 재개 규탄 성명서는 “남북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포격 사건 이후 서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며 긴장 고조를 주도하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끝끝내 남한의 포 사격 훈련 강행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 미국이었는데 말이다.

남북한 당국과 강대국들에게 대화를 하라고 촉구할 뿐 남북한 노동자·민중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노동자·민중의 독립적인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베트남전 반대 운동은 미국이라는 야수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입혀 패배시켰고, 미국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상군 투입을 자제하게 됐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이라크전 반대 운동도 참전국들이 철군하는 데서 결정적 구실을 했고, 중동 민중의 저항과 더불어 미국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데 일조했다. 그 여파로 미국은 북한을 우선적 공격대상으로 삼을 여력을 잃게 됐다.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비중있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민주대연합은 서로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두 계급의 연합을 추구함으로써 노동계급 운동의 요구를 삭감하고, 투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자주계열 활동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반제국주의 쟁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진보진영은 호전적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 식의 해결책에 의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결코 주장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반제국주의 요구들을 독립적으로 제기하며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위키리크스에 진실을 말한 병사를 고문하는 미국 정부

22살 먹은 미군 일병 브래들리 매닝을 지금 미국 정부가 고문하고 있다.

그는 비밀 문서를 위키리크스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매닝은 5개월째 미군 해병대 감옥에 수감돼 있다.

미국 정부는 매닝을 고문해 비밀 문서를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에게 전달했다는 자백을 받아 내려 한다. 자백을 받아 내면 어산지를 간첩죄로 기소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란 생각에서다.

현재 어산지는 보석으로 석방된 후 영국에 머물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그를 성폭행죄로 송환하기를 바라지만 어산지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매닝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매닝은 하루 23시간 동안 독방에 갇혀 있

습니다.

“독방에서조차 그의 행동은 심각하게 제한받습니다. 운동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배개와 침대 시트도 제공받지 못하고 일체의 개인 물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루 한 시간 독방 밖에서 ‘운동’할 수 있는데, 다른 빈 방에서 걷는 것이 유일하게 허용된 운동입니다.”

매닝은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라크에서 미국 헬기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공개했다는 사실을 온라인 채팅방에서 ‘고백’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됐다.

이 비디오는 2007년 7월 12일 이라크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보여 준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그다드 거리를 걸어 가고 있다. 미군 헬기 두 대가 이들을 향해 총을 반복적으로 난사하고 공격을 피해 도주하는 이를 사살한다.

이날 공격으로 열두 명이 죽었다. 그중에는 로이터 통신에서 일하는 언론인 두 명도 포함돼 있다. 아동 두 명도 다쳤다.

헬기 기총 사수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하하하, 내가 맞췄지.” 또 다른 사수는 이렇게 말했다. “뒤편 놈들 꼬라지를 보라지.”

나중에 지나가던 자동차가 다친 이들을 도우려고 멈춘다. 그러자 미군 헬기는 이들을 공격한다. 자동차에 타고 있던 아동

두 명이 다치고 그들의 아버지는 죽었다.

미군 지상병력은 다친 아이들을 발견한다. 그들 중 한 명은 “애들을 전장에 데려온 게 잘못이지” 하고 말한다.

미국 육군은 죽은 이가 모두 저항세력 이었고 전투 중에 죽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죽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른바 ‘수류탄 발사기’는 사실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였고, ‘AK소총’은 카메라였다.

이것은 미국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쉴 수 없이 많은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매닝은 단순히 그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수감돼 있다.

매닝이 폭로했다고 의심받는 또 다른

동영상은 2009년 아프가니스탄 그라나이에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1백 40명을 살해한 사건을 담은 것이다.

미국 정부는 매닝이 아프가니스탄 전장 보고서 10만 건, 외교 케이블 26만 건, 이라크 전쟁에 관한 문서 50만 건을 유출했다고 의심한다.

이 문서들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되자 전 세계 정치인들은 위키리크스를 성토했다. 심지어 일부 미국 정치인은 위키리크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목하자고 주장했다.

사이먼 베스케터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레온 트로츠키의 혁명적 유산 ①

노동자들은 혁명을 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 호부터 연재할 이 시리즈는 레닌과 함께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고 사회주의 운동과 사상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트로츠키의 유산을 다룰 것이다. 이 시리즈의 필자인 존 몰리뉴는 영국 포츠머스대학 교수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의 저자다.

레온 트로츠키(1879~1940)는 70년 전 러시아 독재자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 암살됐다.

트로츠키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 중 한 명이다.

칼 마르크스 사후, 트로츠키는 레닌과 함께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트로츠키는 혁명에서 엄청난 실천적 기여를 했다. 그는 1905년 26살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혁명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1917년 그는 소비에트 의장으로서 러시아에서 노동자 권력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 10월 봉기를 조직했다. 그는 5백만 명에 이르는 적군의 핵심 조직자였고 서방 제국주의 지원을 받는 반혁명 군대를 패퇴시켰다.

나중에 그는 스탈린의 부상에 반대하고 노동자 민주주의와 10월 혁명의 이상을 방어진 좌익반대파를 이끌었다.

트로츠키는 행동을 통해 지도했다. 레닌과 함께 그는 1917년 혁명에 정치적 영감과 사상을 제공한 주요한 인사였다.

트로츠키는 1905년에 이미 러시아 혁명의 전개 과정을 명확하게 예측했다.

당시 러시아 사회주의자들과 급진적 인사들은 차르 치하의 러시아가 혁명적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혁명이 1789년 프랑스 혁명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혁명이 차르를 몰아내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건설할 것이고, 그 다음에야 노동계급이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을 벌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멘셰비키라 불린 온건 사회주의자들은 중간계급이 혁명을 지도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은 자신의 역할을 중간계급을 지지하는 데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동 연속혁명의 축, 이집트 노동자 투쟁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같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중간계급이 [혁명을 이끌기에는]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후진적이어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없다는 생각을 수용했다. 실제로 인구의 다수인 농민에 견줘 노동계급은 소수였다.

트로츠키는 노동계급이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레닌의 생각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투쟁의 힘에 의해 완전한 노동자 권력이 수립될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와 단절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트로츠키는 노동자들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면 다수의 농민이 도시 노동계급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이는 사회주의가 유지되기에는 러시아의 경제적 발전이 아직 미성숙하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는 러시아만 따로 떼서 생각하면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 혁명이 국제적 혁명 물결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러시아에서 노동자 권력이 수립되면,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로 공업화 수준이 높은 독일을 포함

한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로츠키의 사상은 연속혁명 이론으로 불렸다. 이것은 끝없는 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연속혁명은 혁명이 궁극적 목표인 세계 사회주의 혁명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단계 — 예컨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혁명 — 에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1917년에는 트로츠키의 주장이 옳았다. 노동자들은 1917년 2월 차르를 몰아냈고 10월에 노동자 권력을 수립했다.

레닌은 트로츠키의 관점을 수용했고 1917년 4월 볼셰비키당 전체를 향해 이 관점을 수용할 것을 호소했다.

트로츠키는 러시아 혁명을 이끈 볼셰비키당에 가입했다. 볼셰비키는 혁명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목적으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건설했다.

연속혁명의 중요성은 러시아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속혁명은 노동자들이 아직 소수인 식민지나 제3세계 국가의 노동자들이 유럽의 혁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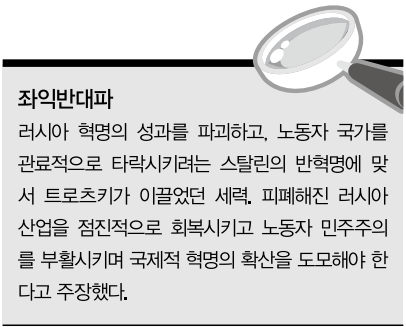
오히려 그들은 자국의 노동자 혁명을 위해 투쟁하면서 전 세계적 혁명 과정을 주도할 수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퍼진 오늘날에도 독재 정권의 지배를 받는 이집트나 억압받는 나라인 팔레스타인 같은 곳에서는 연속혁명이 여전히 중요하다.

즉, 이곳에서 운동은 자신의 목표를 민주주의나 민족적 자유에 한정하거나 중간계급이 받아들이지 않는 투쟁 방식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연속혁명론에 따르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노동계급은 투쟁을 이끌면서 이 투쟁을 국제 노동자 혁명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좌익반대파

러시아 혁명의 성과를 파괴하고, 노동자 국가를 관료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스탈린의 반혁명에 맞서 트로츠키가 이끌었던 세력. 피폐해진 러시아 산업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고 노동자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며 국제적 혁명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간 끈질긴 싸움 끝에 복직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성향아 씨

“이제는 정규직 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돼,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

당시 나는 비정규직으로 4년 넘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공단은 나를 포함한 대상자 14명을 정규직의 일종인 별정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1년짜리 계약을 반복하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고, 각종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되고, 장기적인 삶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에 힘과 의욕이 생겨났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오리엔테이션에는 나를 뺀 13명만 참가할 수 있었다. 나는 인사과로 불려가 ‘민주노동당원’이라서 이번 전환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직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그 근거라고 했다.

고대하던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마흔살 나이에 해고 위협을 느끼는 순간, 내 두 다리가 힘 없이 땅 속으로 꺼지는 듯한 공황상태를 겪었다.

하지만 나는 나처럼 민주노동당원이란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당했다가 지방·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해 복직한 하남시청 비정규직 노동



연대를 건설해 복직을 쟁취한 성향아 씨

자의 판결문을 들고 다니며 투쟁을 시작했다.

민고 따르던 선배와 동료들이 ‘생계가 우선이니 일단 탈당부터 하고, 조용히 지내면 실마 해고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며 탈당할 것을 권유했지만, 난 끝내 탈당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을 범죄 취급하는 상황에서, 탈당은 ‘죄인’ 혐의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탈당한 후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예전처럼 동료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겠는가? 여가 시간에 정치활동을 해 온 것이 누구에게 무슨 해를 끼쳤다고 해고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가?’ 하고 생각했다.

얼마 후 지방·중앙노동위원회는 내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결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배하니 법에 맞게 고치고, 나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터무니없게도 내게 1년짜리 계약직을 제시했고, 내가 거부하자 나를 바로 해고했다.

전체 직원들에게 ‘성향아는 공단의 계약요구를 거부하며 제 발로 걸어나갔다’ 하고 비난했다. 그러나 공단에서 7년 넘게 일한 사람도 1년짜리 계약을 거부하며 40여 일 동안 버틴 끝에 승리한 전례가 있다. 나도 끈질기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공단은 나를 해고한 지 보름 만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공단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 투쟁을 하던 중 전해 들은 ‘정치활동 금지 규정’ 삭제 소식과 동료들의 격려는 나에게 힘이 됐다.

사형 선고

당시 공단 정규직노조 집행부는 나의 연대 호소를 외면했다. 하지만 나는 정규직노조 사무실에 투쟁물품을 맡겨 두고 매일 들락거리며 노조와의 실낱같은 연

결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노조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함께 등으로 구성된 ‘부당해고 철회 정규직 전환 공대위’ 덕분에 정규직노조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소송비용을 모아 준 정규직 노동자 31명과, 매일 출근투쟁 때마다 차와 간식들을 건네 준 동료들 덕분에 나는 두 번이나 해고되기도 공단을 제집 드나들 듯할 수 있었다.

동시에 나는 인근 작업장과 투쟁 현장들에 연대하려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녔다. 선거 때는 민주노동당 선거차량 운전 자원했고, 뉴코아 해고자들과 함께 지역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를 돌아다니며 열흘간 7백여만 원을 투쟁기금으로 모았다.

예술의 전당, 국민체육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강남성모병원, 쌍용자동차 등 수많은 곳에서 탄압과 억압에 맞선 사람들의 저항에 연대하고 나의 투쟁소식을 전하며 지지서명도 받았다.

공단 앞에서 시위할 때 운산참사, 촛불 운동탄압, 쌍용차대량해고에 항의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출근하는 동료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공단 앞 집집집회에는 매년 1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마침내 2010년 11월, 대법원은 전원 일치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나는 생계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하던 일을 정리하고, 공단과 면담해 2011년 1월 준손 복직하기로 했다.

나는 “더는 계약직이 아닌, 3년 전 나로 인해 만들어진 자리에 발령해 줄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

3년 넘게 벌인 투쟁이 값진 승리를 거둔 것이다.

현재 공단 측은 전환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도 “법원 판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허용한다”며 자신들의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는 신분 전환될 때까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이 되는 것이 지난 3년간 내게 힘을 보태 준 수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보답이 될 것이고, 힘겹게 삶과 미래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내가 다른 노동자들의 승리 소식에 웬지 모르게 힘이 생겨난 것처럼 말이다.

성향아

비정한 이윤논리로 고통받는 충북희망원 아이들

충북지역의 아동양육시설인 ‘충북희망원’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운영진 때문에 폐쇄 위기에 놓였다.

충북희망원은 미혼모와 가족 해체로 생겨난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로 아이들 66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희망원 운영진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려 한다.

충북희망원은 국가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이를 엉뚱한 데 사용했다. 노조 조합원들이 노조를 만들기 직전 보건복지부에 내부 고발 민원을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운영진 가족의 차량과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고 기금을 넣는 데 쓴 4천1백만 원이 회수됐다.

노동자들이 연차 등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고 임금도 5억 원이 체불됐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희망원 운영진들은 아이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노동자들 임금으로 장난을 쳐 온 것이다.

타락상

시설이 폐쇄되면 함께 생활하던 아이들은 정월 미달인 다른 시설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이미 아이들은 자기를 방에 별도로 잠금장치를 만들어, 원장과 사무국장이 다른 시설로 보내려고 하면 문을 잠그겠다고 하는 등 시설 폐쇄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청주시장은 시설 폐쇄에 반대한다면서도 희망원 측 눈치를 보며 어떤 책임 있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시설 폐쇄가 노조 책임인 양 떠넘기고 있다. 민주당의 계급적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노동자들은 시설 폐쇄만은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고소 취하를 협상카드로 제시했지만, 운영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한 제시 후 운영진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노동자들이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설 폐쇄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한 조합원도 집회에서 진정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협상이 아니라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발언했다.

충북희망원 폐쇄 시도는 복지시설마저도 이윤추구 수단이 된 자본주의의 타락상을 보여 준다.

배상진

민주당과의 계급연합은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해악적이다

최근 주요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이 남북한 상호 포격 사건을 다루면서 미국 정부를 일관되게 비판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다함께’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항공모함을 동원한 서해상 한미연합훈련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한미 양국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반면 12월 21일에 야5당이 발표한 연평도 포사격 훈련에 대한 성명서는 남북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과 패권 강화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라며 지지했는데도 말이다.

12월 30일에 범민련,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이 발표한 성명서는 미국 정부를 비판하기는커녕 ‘미국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군사적 위협주의에 대해 경계심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달리 취급했다.

지금 주요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이 미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추는 것은 선거주의 압력과 민주당과 협력 노선의 영향이 큰 듯하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10년간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지지했고 남북한 상호 포격 이후 호전적인 대북규탄결의안도 당론으로 찬성했다.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민주당은 한나라



11월 30일 야5당과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비상시국회의

당의 대북결의안과 별 다를 것 없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주요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은 이런 민주당과 공동 보조를 맞추려고 반이명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아시아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인 미국 제국주의는 거의 비판하지 않고 있다.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인 ‘반제국주의’를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모순이다.

1935년 스탈린이 채택한 인민전선 노선도 마찬가지로 약점을 드러냈다. 당시 소련은 히틀러의 위협에 대항해 영국·프랑스 정부 등과 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압력용으로 인민전선을 만들었다. 이후 코민테른과 각국 공산당들은 유럽을 지배하는 열강인 영국과 프랑스 정부를 비판하는 반제국주의 미사여구들을 조심스럽게 회피했다.

1935년 코민테른 7차 대회에서 영

국 식민지인 인도의 공산당 대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프랑스의 식민지인 시리아와 베트남에서 참가한 대표들도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한 언급을 이리저리 회피했다.

오늘날에도 반제국주의 정점은 매우 중요하다. 제국주의 문제는 노동자 투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애국주의를 부추기며 노동자 투쟁을 단속했고 실제로 4월 말 5월 초로 예정돼 있던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지 않았다.

최근 주요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의 입장은 노동자들의 반제국주의 의식과 투쟁을 진전시키는 구실을 회피하고 있다. 일관된 반제국주의 투쟁과 노동자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같은 적대적 계급과의 연합 전략은 해악적이다.

김은영

서울시교육청은 체벌 대체 처벌을 지지하지 말아야

12월 29일, 초·중·등교육법 개악을 시도하는 교과부가 출석 정지를 체벌 대체 수단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출석 정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에 준하는 처벌을 지지함으로써 체벌 금지의 의의를 퇴색시킨 것이다.

2009년 12월 17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했을 때 나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기뻐했다.

이제 학교에서 두발검사를 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학생부 앞에서 매일 매를 맞는 학생들을 볼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불만스럽게 여기는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악하려고 한다. 특히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만 금지한다는 이런 모호한 조항들은 체벌을 전면 금지한 학생인권 조례를 상위법 위반으로 몰아 무용지물로 만들고 말 것이다.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늦게나마 우리나라도 학생들의 인권에 관심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뻐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에 장단을 맞춰 이른바 “자꾸 문제 일으키는 학생”(〈조선일보〉)은 출석 정지를 시키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늘려 전체 ‘문

제 학생’ 수용인원을 세 배로 늘리겠다고 주장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진보 교육감이라면, 일관되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지금의 교육환경은 과밀학급이라 선생님도 학생들 개개인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대학 진학에 관한 얘기뿐, 진솔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 이런 상황은 그저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을 일관되게 실현하려면 교사 수를 늘리고, 입시경쟁을 완화해야 한다.

송조은

왜 집회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는가

“집회에서 장사를 한다”, “그렇게 좋은 내용이면 공짜로 주지.”

내가 집회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할 때 가끔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접한다. 왜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집회에서 신문을 판매할까.

내가 만난 〈레프트21〉 구독자들은 대체로 기업과 정부를 통쾌하게 비판하는 점이 ‘청량음료 같이 속 시원’하기 때문에 좋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가능하려면 시중의 다른 신문들과 재원부터 달라야 한다.

조종동 같은 신문은 기업주들의 이해를 대변할 뿐 아니라 그 신문의 사주들 자신이 이 나라 지배자이기도 하다.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자유주의 성향 신문들도 기업과 정부의 광고를 받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 최근 〈한겨레〉에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게재된 것은 진보적인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레프트21〉은 정부 후원과 기업 광고를 받지 않고 신문을 지지하는 노동자와 학생, 평범한 사람들의 돈으로 운영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기업이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할 때 날카로운 비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문 판매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다.

불균등

〈레프트21〉은 집회에서 공개 판매대를 설치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판다.

어떤 사람은 ‘이미 알 거 다 아는 사람들 말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회의 요구를 알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신문 판매가 운동 참가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부각해 단결에 해롭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이미 현실에는 각각 고유한 정치를 가진 단체들이 존재한다. 노동자들도 주변 환경과 구체적인 경험이 다르고 설사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사장들에게 맞서 싸우는 사람들 역시 의식이 불균등하다.

집회 같은 행동에 나설 때도 불균등한 의식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운동의 방향을 놓고 여러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야 하는가. 현대차 공장점거 파업 중에 정규직 연대 파업을 호소하던 연대 단체들은 외부세력인가. 연평도 상호 포격 사태에서 더 큰 책임은 누구고 누구를 좀더 비판해야 하는가. 등록금 인상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운동 내에서 필요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접한 노동자, 학생 스스로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두고 논쟁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다. ‘장사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근본적 차이점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다.’

〈레프트21〉을 집회 대열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운동과 대화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이준현

정정합니다

지난 호(47호) 독자편지 ‘고려대 자치공간 철거 반대 투쟁이 승리하다’ 내용 중 셋째 문단에 “후배들의 초대를 받아”라는 부분은 담당기자의 실수로 잘못 들어간 부분이라는 점을 알립니다.

조종동에게 방송을 헌납한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조종동과 매일경제에 종합편성(종편) 방송 채널을 선물했다. 연합뉴스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에 선정됐다.

이명박은 그동안 “공영방송을 관제방송으로,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변질시키려 방송을 장악하고, 조종동 방송 진출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종편 방송 채널 선정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리즈의 결정판이다.

조종동과 매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연합뉴스도 매년 수백억 원씩 정부 지원

금을 받으며 4대강 사업 찬성 여론이 높은 것처럼 조작하는 등 친정부 일색 보도들을 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영리를 위해 연합뉴스TV에 주주로 참여했다는 것은 연합뉴스TV의 보도채널 승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정부는 우리더러 조종동을 신문만이 아니라 방송에서까지 보라고 강요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종편

사업자들을 위해 ‘황금채널’ 제공, 편성과 심의 안배,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및 전문의약품’ 광고까지 허용할 태세다.

조선일보는 “의약품, 생수 광고의 경우 일정 기간 종편 사업자에만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추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병원 및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은 한마디로 환자 호주머니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종편 광고 사업자들의 이

익을 챙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국내에서 방송되고 있는 (일반)의약품도 과장·허위 광고가 많다.

그런데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고 의료인의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광고가 허용되면 소비자에게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조종동에게 주는 새해 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미진



2011년에도 여전히 진행될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이창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많은 사람들이 올해에는 경제가 회복됐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세계 주요 경제기구들이나 유명 경제학자들도 올해가 지난해보다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 연말이 되면 지난해가 정말 호시절이었음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전 세계 지배자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던 미국 경제의 더블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중국 경제도 경착륙을 보이지 않았다. 남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에 빠진 긴 했어도 독일 경제가 회복된 덕분에 유로존 경제는 그럭저럭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2011년에도 이어질지가 문제다. 2010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올해《세계경제 전망》보고서를 보면,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시장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지만 세계경제는 지난해 4.8퍼센트에서 올해 4.2퍼센트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6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유로존 경제도 남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1.5퍼센트의 저성장을 예상했다.

올해 세계경제 전망을 가능하는 요인은 다음 세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미국 경제가 얼마만큼 회복될 수 있을까?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를 어느 정도로 위기에 빠뜨릴까? 셋째, 중국 경

제의 회복력이 2011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여전히 침체 중인 미국 경제

올해 미국 경제가 2010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로 우세한 것 같다. 전형적인 비관론자로 알려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이 지난해보다 1퍼센트 포인트 하락하겠지만 더블딥 침체 우려는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금융위기 이후 진행돼 온 자산 디레버리지(부채 축소)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 완화와 국제 매입 같은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지난해 12월 7일 발표된 부유층을 포함한 일괄 감세 연장 조치로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 이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는 미국 경제가 2011년에 4퍼센트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전망은 희망이나 기대에 가까워 보인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지 않아 실업률은 여전히 9.8퍼센트를 맴돌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촉발시켰던 미국의 주택시장은 말 그대로 더블딥에 빠져 있는데, 미국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지수(케이스-실러 지수)는 지난해 후반 하락세를 이어 갔다. 지난해 5월

까지 제공된 세계 혜택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집을 샀기 때문이다. 루비니 교수는 “세계 혜택은 미래의 주택 수요를 흡수했고, 혜택 종료는 주택 가격을 30퍼센트 더 떨어뜨려 케이스-실러 지수를 지난 수개월 동안 하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GDP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그런데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고용이 호전되지 않는 한 민간소비는 증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8천5백 80억 달러에 이르는 감세 조치, 6천억 달러에 이르는 2차 양적완화 같은 ‘스테로이드 주사’의 효과 때문이다. 폴 크루그먼 예일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에는 실업률이 높다”며 “장기적인 재정적자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긴축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최근 제시된 긍정적 경제지표만으로 올해 경기전망을 낙관하는 것은 단견이라고 꼬집었다.

개선된 경기지표를 통해 일각에서 올해 성장률이 4퍼센트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경제가 바닥권을 탈출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는 것은 잘못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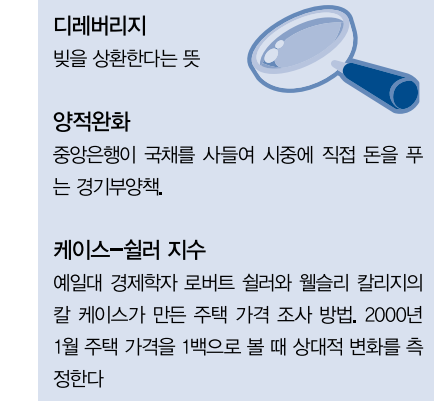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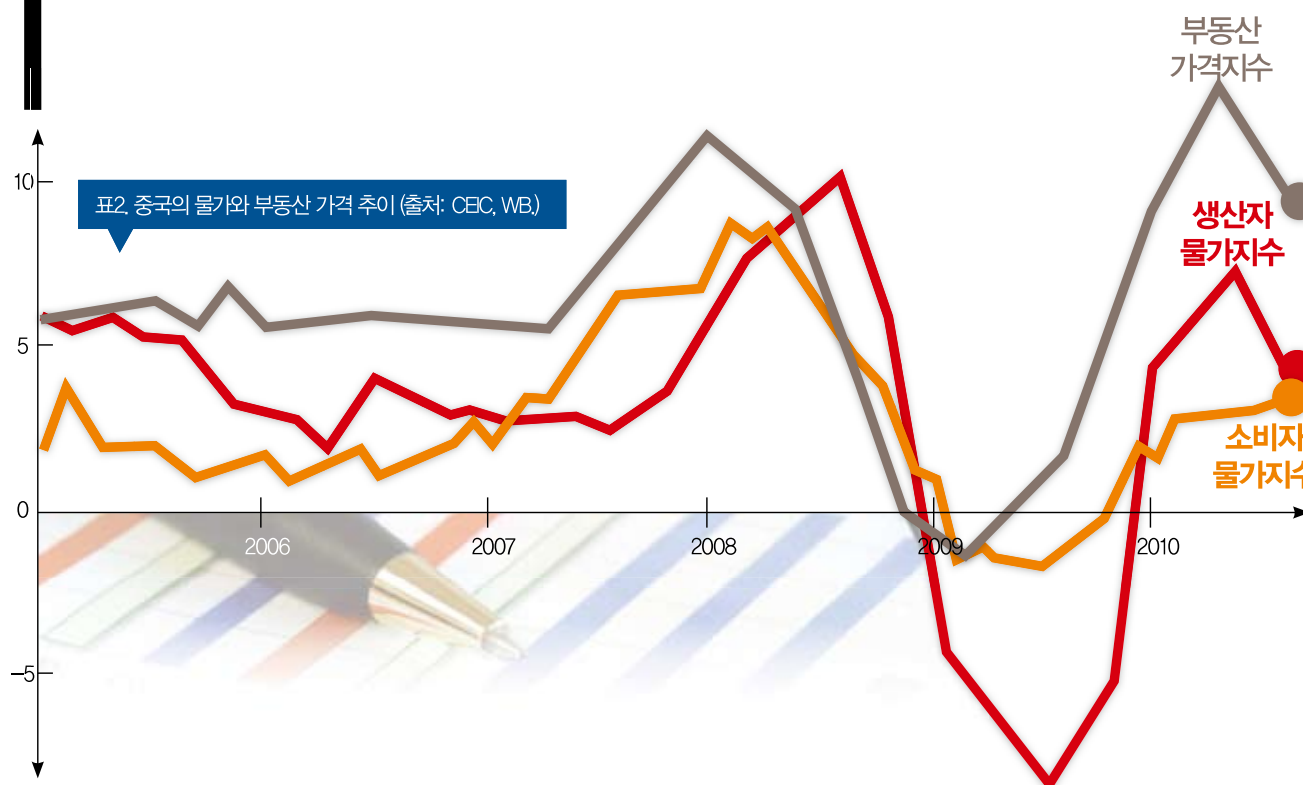
EU 경제 규모 5위인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처지로 만들 수 있다.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스페인까지 번진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IMF의 구제금융 자금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그리스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더 큰 국가는 IMF가 구제할 여력도, 정당성도 없다. 루비니 교수는 “유럽 재정 위기가 몇 달 내로 무차별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회복을 기원하며 기대하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의 부실채권 매입 여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011년 가을부터 유럽중앙은행 총재직을 맡을 악셀 웨버는 부실채권 매입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재정 위기가 확산하면 위기 대처 방안을 두고 유로존 국가들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또한 몬테네그로 같이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스나 포르투갈, 또는 아일랜드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나 홀로 성장?

중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신흥 경제는 올해도 고속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나 홀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요 경제 전망 수치에 서도 알 수 있다. OECD의 경제 전망을 보면, 중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의 10.5퍼센트에서 올해에는 9.7퍼센트로 낮게 잡았다. IMF의 경제 전망도 9.6퍼센트이며, 유엔경제사회국은 2011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가장 낮은 8.9퍼센트로 예상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1년에는 9.7퍼센트, 2010년 예상치 9.8퍼센트, 하지만 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흑자국이고 외환 보유고가 2조 달러가 넘는다는 현실에도 무관한 경기부양책을 쓸 수는 없다. 중국의 재정 적자가 미국이나 일본, 또는 유로존 국가들처럼 심각하



디레버리지 빚을 상환하는 듯

등을 조처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여섯 차례에 걸쳐 긴축 조치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09년 이래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이 시중에 풀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와 미국 소비시장의 회복 지연은 중국의 수출 증가세를 대폭 둔화시킬 것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계속 가할 것 같다. 이런 요소들은 중국이 나 홀로 성장을 계속할 수 없는 배경이 된다.

2011년에는 국가 주도 투자를 줄이고 그 몫을 민간부문에 담당하도록 한다지만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일자리는 줄어 들고(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농민공들이 그 희생자다), 도시의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0년에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민간부문의 실질소득을 줄였다.

위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부동산 부문의 고정자산투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부분적인 회복기를 틈타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나타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강화하고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던 혜택을 축소하는

신흥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말미암아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미국 경제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고려해야 할 판인데, 이 조치를 두고 시장 근본주의자들과 케인스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형성될 것이다. 남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고, 위기의 부담을 누가 나누어 질 것인가를 두고 유럽 주도 국가들이 분열할 것이다. 사태가 더 나쁘게 진행된다면 남유럽의 위기가 스페인으로 번져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를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사태들은 모두 확률적 차이는 있지만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태 뒤에는 너무나 분명한데도 두루 언론이 말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 이 있다. 첫째는 투자의 수익성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아마아마하게 집행했음에도 관행은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지난 번 호황 때 너무나 많은 공장과 시설들이 건설돼 아직도 그 가치가 파파릴 자본이 많이 있다.

둘째는 경제 위기의 대가가 노동자 대중에게 떠넘긴다는 점이다.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언제 위기가 있었느냐는 듯이 무뎠던 상여금 봉투를 자랑한다. 하지만 전 세계 노동자들은 복지서비스 삭감, 일자리 축소, 물가상승 때문에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생활수준이 하락했다.

2010년에 임금 5퍼센트 정도 올라 노자리 축소, 물가상승 때문에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생활수준이 하락했다.

이제 2010년에 순이익이 1조 원을 넘는 대기업이 스무 곳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순이익이 15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기아 자동차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순이익도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제 2010년에 순이익이 1조 원을 넘는 대기업이 스무 곳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순이익이 15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기아 자동차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순이익도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제 2010년에 순이익이 1조 원을 넘는 대기업이 스무 곳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순이익이 15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기아 자동차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순이익도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제 2010년에 순이익이 1조 원을 넘는 대기업이 스무 곳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순이익이 15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기아 자동차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순이익도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 경제 — 불안정한 회복마저 흔들릴 것

지난해 한국 경제는 6퍼센트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에 0.2퍼센트 성장에 그쳤기 때문에 2010년만 보자면 경제 상황은 꽤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2009년에 견적 성장을 한 덕분이다. 2009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미국·EU·일본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은 2009년 9퍼센트에서 2010년에는 10퍼센트로 높아졌다.

이처럼 주요 경제들이 불안정하나마 회복되면서 한국은 주요 산업인 반도체·자동차 등에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었다. 2010년 수출은 28.5퍼센트 상승했다.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도 크게 늘었는데, 2010년 7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84.8퍼센트를 기록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반도체·자동차 두 산업의 생산 증가가 전체 제조업 생산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등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대폭 늘어 25퍼센트 증가했다(2008년과 2009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1퍼센트와 -9.1퍼센트).

2008년 금융 위기 직후 한국의 주요 위험 산업이었던 건설·해운·조선 중 해운·조선 부문도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2010년 세계 교역량이 2009년에 견줘 13.5퍼센트 증가하면서 해상 운임이 오르며 해운업계의 수익성이 회복됐다. 해운업계가 회복되자 조선업도 회복되고 있는 데, 전 세계 조선사의 1~9월 신규 수주량은 2009년 같은 기간의 다섯 곱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조선사들의 2010년 1~9월 신규 수주도 여섯 곱질이나 늘었다. 물론 선박 가격은 여전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해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9년 수출이 43.5퍼센트 감소하고 내수도 9.6퍼센트 감소했던 GM대우도 2010년 들어 수출이 38퍼센트, 내수가 11퍼센트 증가한 데다 GM 본사의 지원, GM과 산업은행의 지원 협력 체결 등으로 일단 위기를 넘긴 듯 보인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순이익이 1조 원을 넘는 대기업이 스무 곳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순이익이 15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기아 자동차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순이익도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트바이트 일자리

생산과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증가했는데, 이 때문에 이명박은 “지난해 성장이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 약 3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양질의 일자리도 크게 늘었다”며 자신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 생색을 냈다. 그러나 이번 위기 전 수준으로 고용률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언제 위기가 있었느냐는 듯이 무뎠던 상여금 봉투를 자랑한다. 하지만 전 세계 노동자들은 복지서비스 삭감, 일자리 축소, 물가상승 때문에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생활수준이 하락했다.

2010년에 임금 5퍼센트 정도 올라 노동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사실 이런 임금 증가는 2009년에 삭감된 실질임금을 만회한 것일 뿐이다. 이후에 벌어진 대우 증가에 달성한 높은 성장률의 혜택도 대부분 대기업·부유층에게 돌아간 셈이다.

2010년에 임금 5퍼센트 정도 올라 노동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사실 이런 임금 증가는 2009년에 삭감된 실질임금을 만회한 것일 뿐이다. 이후에 벌어진 대우 증가에 달성한 높은 성장률의 혜택도 대부분 대기업·부유층에게 돌아간 셈이다.

많은 경제연구수들은 2011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은 4퍼센트대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마저 전 세계 경제에 여전히 남아 있는 금융·재정 위기의 뇌관들이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정과 주요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은 2011년에도 여전하다. 미국의 주택 가격 하락, 유럽의 재정·금융 위기, 중국의 높은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중 어느 하나라도 폭발한다면 전 세계 경제는 거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유로 지역의 금융·재정 위기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금융 부실과 재정 적자 확대 때문에 구제금융을 받았고, 조만간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줄을 잇고 있다. 스페인은 유로 지역(유로화 사용 16개국) 4위 경제국인 만큼 구제금융 시 유로 지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금융 충격

이런 금융 위기는 한국 내의 금융 불안정과 결합돼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

2010년 들어 10월까지 외국인 투자액이 38조 원 넘게 늘었는데 이 돈이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벌어질 수 있다. 또, 건설산업에 많은 대출을 한 저축은행 업계는 원리금을 받지 못해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고, 3백50조 원을 몰려한 주택담보대출과 가계 부채도 위험 요인이 다.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하면 금융권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5퍼센트 경제 성장, 3퍼센트 물가상승”, “일자리 28만 개 창출” 등 보수 언론조차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 예측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성장 목표와 물가 억제 목표는 연초부터 충돌하고 있다. 미국·유럽이 경기부양을 위해 풀어 놓은 막대한 자금 때문에 세계적인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가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와 물가”를 선포하며 호들갑을 떨지만 ‘MB 물가’ 관리가 실패했던 것처럼 이번 물가 억제 정책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식품·정유 기업의 이윤을 제한하는 방법은 쓰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늘어나는 일자리도 저질 일자리라 고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내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파견 업체를 대형화하고, 청소·경비 업무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2년)을 풀고, 유엔군부대 확산하는 등 비정규직 확대 정책뿐이기 때문이다.

결과 2011년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또다시 폭발하는 일이 없더라도 노동자·서민이려면 일자리 30만 개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게다가 2010년에 늘어났다는 일자리 30만 개 중 3분의 1이 주당 18시간 미만을 일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였다.

공식 실업률이 낮아졌지만 이는 일자리가 충분하게 늘어나서가 아니라 구직단념자처럼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이 낮아진 것도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42.8퍼센트)으로 떨어지면서 생긴 착시 현상일 뿐이다. 기업주·부처 들만 위한 경제 살리기를 추진하며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워야만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이후에 벌어진 대우 증가에 달성한 높은 성장률의 혜택도 대부분 대기업·부유층에게 돌아간 셈이다.

2010년에 임금 5퍼센트 정도 올라 노동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사실 이런 임금 증가는 2009년에 삭감된 실질임금을 만회한 것일 뿐이다. 이후에 벌어진 대우 증가에 달성한 높은 성장률의 혜택도 대부분 대기업·부유층에게 돌아간 셈이다.

오바마 – 기대에서 배신감으로

오바마는 처음에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재 오바마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범이 돼 있다. 이명박과 아주 죽이 잘 맞는 오바마를 보며 당혹감이 느껴질 정도다. 게리 영은 우리에게 오바마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실망과 배신감으로 바뀌었는지 설명해 준다. 게리 영은 〈가디언〉 칼럼니스트이자 저술가로, 현재 〈가디언〉 뉴욕 특파원으로 있으며, 미국 진보 주간지 〈네이션〉에 미국 정치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이 글은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0년 12월호에 실린 것을 일부 축약 번역한 것이다.

오바마가 당선했을 때 사람들은 거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기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8년 집권이 끝나고 오바마가 승리하자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품은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오바마는 최악의 반동적인 공화당 선거 운동에 맞서서 출마한 흑인 민주당 후보이고, 최악의 반동적인 대통령이 거의 10년간 집권한 뒤에 대통령에 당선한 것이다.

2년 전 취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83퍼센트였다. 당시 껄껄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과반이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 보험료를 낮추고, 대안 에너지 생산을 갑절로 늘리고, 세금을 줄이고,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손쉽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어림잡아 응답자 3분의 2 이상이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어린이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하고,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줄이고, 전국에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리라고 생각했다.

70퍼센트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1기를 마칠 때 쯤에는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리라고 봤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너무도 빠르게 무너졌다. 얼마 전 중간선거에서는 1948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집권당이 패배하고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으로 복귀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도 몇 석을 잃었다.

2008년 대선 당시에 미국의 분위기를 엿볼 겸, 나는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 있는 한 바에서 개표를 지켜봤다. 그곳에서는 흑인들이 가게를 가득 메우고 샘 쿡의 “세상은 바뀐다”와 맥파든과 화이트헤드의 “이제 우리를 막을 자 없네”를 흥겹게 부르고 있었다.

2년이 지난 뒤, 나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티 파티 익스프레스 모임의 초대를 받아 아리아 호텔 20층에 자리한 호화로운 연회장과 카지노에서 개표를 지켜봤다. 그곳에서 나는 잘 차려 입은 백인들이 재정적자 감축을 떠들어 대는 것을 들었다. 선거가 정치 분위기를 알려 주는 유일하고 가장 믿을 만한 통로라고 친다면, 2년 전과 지금이 같은 나라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다. 오바마가 집권한 첫 해에 빈곤율은 1.8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급등했다. 이것은 빈곤율 기록을 시작한 후, 1년 세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경우였다. 지금 실업률은 9.6퍼센트다. 그가 권력을 막 쥐었을 때에 실업률은 7.6퍼센트였다. 주택 압류 비율도 늘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는 건강보험 논쟁 당시에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했다. 부시가 만든 고문 기관들이 대부분 온전히 남아 있다. 이라크 점령이 확대됐다. 주택 차압을 중지하겠다는 약속도 저버렸다. 그러나 지난 2년에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자면 더욱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다.

실패했음에도, 적어도 미국 안에서 오바마는 린든 존슨[1960년대 ‘위대한 미국 사회’라는 야심찬 개혁 정책을 추진한 미국 대통령] 이래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다.

오바마는 건강보험 개혁 법안, 경기 부양 법안, 금융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라크 주둔 미군을 대폭 감축했고, 저소득 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늘렸고, 여성 대법관 두 명(그중 한 명은 라틴계다)을 임명했다.

그러나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이런 성과는 너무 사소한 것이어서 오바마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랫동안 불황



사진 출처: Obayomi Azikwe

2009년 10월, 연방 정부 보조금을 타기 위해 필수적으로 물려드는 사람들 오바마는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지지자들이 요구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건강보험 개혁이 아니라 건강보험 그 자체를,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군살 뺀 이라크 점령이 아니라 점령 종식을 요구했다. 또, 학자금 대출이 늘어 봤자 등록금 액수가 크게 늘었기에 별 소용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하고 환멸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중간선거 당일 민주당 쪽이든 공화당 쪽이든 상대편으로 표가 넘어가진 않았다. 민주당은 2008년에 견줘 흑인 표와 라틴계 표를 10퍼센트 잃고 젊은이 표를 12퍼센트 잃었다.

이런 득표율 하락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패한 이유는 지지자들이 그 아말로 너더리를 내고 사기 저하돼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자유주의자들(특히 오바마 당선을 위해 엄청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한 이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런 배신감을 가장 분명히 표현한 사람은 지난 9월 대통령과의 대화 방송에 출연한 흑인 여성(오바마 대통령의 2008년 선거 지지자들 가운데 가장 든든한 집단) 벨마 하트였다.

하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저는 당신, 당신이 이끄는 정부, 그리고 제가 표를 던진 이유인 당신이 말한 변화를 옹호하는 데 지쳤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의 상황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정서는 이해할 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행동하기보다는 대통령에게 의지하고픈 심정을 반영한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좀더 잘했다면 상황이 달랐으리라. 그가 분발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의 비난은 은연중에 한 인간과 관직을 숭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한 숭배는 민주주의와 들어맞지 않고 좌파 정치와도 양립할 수 없다.

사실, 제2차세계대전 이래 미국에서 이뤄진 모든 항구적이고 진보적인 발전은 선거 정치 바깥에서 대중이 행동했을 때 나타났다. 이런 행동은 정치인들과 법원이 대중의 열망에 부응하게 만들었다.

미국 중간선거는 사람들의 보수화를 보

여 준 것이 아니었다. 출구조사를 보면, 비록 공화당에게 의회 권력이 넘어갔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공화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들은 공화당의 승리를 대중 운동의 승리로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티 파티

흔히, 티 파티로 알려진 저항적 포퓰리즘 덕분에 공화당이 승리했다고 여긴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몇 달에 걸쳐 전국의 모든 티 파티 모임과 접촉을 시도하며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있지도 않은 모임이 많았다고 밝혔다.

모임의 70퍼센트가 2010년 한 해 동안 정치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티 파티가 가장 극적인 성과를 올린 바로 그해에 말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티 파티를 “운동이라기보다는 뚜렷한 연결망 없이 모인 이질적인 집단이며 놀랍게도 정치 문제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묘사했다.

티 파티를 전국적으로 활기 넘치고, 기세등등하며, 주도권을 쥔 세력으로 그리면서 티 파티가 먼저 공화당을 접수하고 다음엔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사실은 두 가지의 티 파티 현상이 존재한다.

첫째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매우 느슨하게 소속된 모임으로, 그들 대부분은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을 티 파티 참여자라고 부르지만, 그러한 일체감을 빼면 그 사람들을 티 파티라고 부를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

조직적 구조도, 리더도 없고, 회원 규약이나 강령도 없다. 그것은 사실상 한 세대 이상 존재해 온 미국 우파를 재배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름만 새로 붙인 것이었다.

둘째는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단체들이 기층을 대변하고 티 파티를 대표한다고 말하지만, 이메일 리스트를 공유하는 것을 빼고는 티 파티와 어떠한 조직적 연계도 갖고 있지 않은 단체들이다.

루퍼트 머독(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익

언론 재벌)이 소유한 〈폭스 뉴스〉의 무비판적이고 지속적인 보도의 도움을 받아, 티 파티라는 이름과 일체감은 있지만 아직은 어설픔고 느슨한 집단을 응집력 있고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으로 변화시켰다.

티 파티가 기층 운동을 가장해 “거짓 선동”을 펴고 있다는 주장은 진정한 요점을 놓치고 있다.

티 파티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불만을 날조(뉴욕 맨하탄에 이슬람 센터를 짓는 문제나 오바마의 종교와 출생지와 같은 것들)하면서가 아니라, 은행 구제 금융, 일자리 문제, 주택 가압류 문제 등 현실의 불만들을 이용하면서부터다.

1994년 공화당 혁명을 이끌어서 중간선거에서 클린턴을 좌절시켰던 뉴트 김리치는 이번 중간 선거 2주 전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일자리를 위한 순회 강연회’에서 연설했다.

지지자들은 “이곳에 일자리를 만들라, 지금 당장 일자리를 만들라” 하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다.

연단에서 그들은 은행 구제 금융과 정부 지출에 격분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들이 제안한 해결책이 사이비에 불과할지라도, 그들의 불안감 가운데 많은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상, 그들도 그런 문제에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물론, 경제가 나아진다면 이러한 불안 가운데 어느 것도 더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우파가 건축 정책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그것은 정부의 노력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오바마를 도울지 그렇지 않을지는 그의 정치 책략이 공화당을 능가하는 정도에 달렸다. 그는 공화당을 자신이 국민을 위해 하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당으로 보이게끔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홍보전에서 누가 이기든, 사람들은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번역 정중수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장호중

《마르크스21》 8호에 실린 내 서평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을 비판한 홍기표 기획위원(이하 홍 위원)의 글(문제는 세금일세, 이 사람들 아)이 1월 3일 <레디앙>에 실렸다. 그 글의 요지는 이렇다.

첫째, ‘부자들한테서 재원을 빼앗아 와서 복지를 늘린다’는 나의 대안은 “임격정식 기본논리”이며 낡은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홍 위원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선한 전략”이다.

둘째, 세금(조세제도)은 여차피 계급 타협적 제도다. 따라서 자본주의 타도를 추구하는 나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금 문제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모순이다.

셋째, 홍 위원에게는 “공장주경도 못 해 본 사회주의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버릇이 있다.”

마지막 문제부터 얘기하자면 그 버릇은 빨리 버려야 할 나쁜 버릇이다.

그는 “용접봉 한 번 못 만져 본 자칭 계급투쟁 종사자들” 운운하며 거들해서 사회주의자들을 ‘현실도 잘 모르는 철부지 몽상가들’로 묘사한다.

그러나 나와 홍 위원의 진정한 차이는 ‘공장 노동을 하며 용접봉을 만져 봤나 아니냐’에 있지 않다. 설사 ‘공장 구경을 하고 용접봉도 만져 본’ 노동자라 하더라도 그가 혁명적 대안을 제시하면 홍 위원은 여전히 그것을 ‘우습게 여길’ 것이다.

조야한 경험주의적·노동자주의적 논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깎아내리려는 나쁜 버릇은 버려야 한다.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파업 복지를 삭감하려던 조스팽 정부의 공격은 강력한 역풍에 부딪혀 좌절됐다. 이 투쟁은 전 세계 정부들의 신자유주의적 복지 삭감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 지를 보여 줬다.

그런데 홍 위원이 “우습게 여기는” 것은 혁명적 대안만이 아니다.

홍 위원은 ‘부자에게 세금을’ 같은 오래된(전통적인) 개혁 요구조차 임격정까지 들먹이며 낡은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바로 이런 정치적 태도를 나는 《마르크스21》에 실린 서평에서 비판하고자 했다.

내가 《마르크스21》에 쓴 서평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레디앙)와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도서출판 뫼)의 저자들은 유럽 복지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한국에서 그 정도 수준의 복지를 이루려면 한국 노동자들도 유럽 노동자들처럼 보험료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혀 ‘정의’롭지 않다. 한국에서 복지 재정이 부족한 것은 기업주·부자들이 세금과 보험료를 덜 내기 때문이지 노동자들의 부담이 적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기여금 지출은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평균 부담 수준을 상회하지만 기업주들의 부담은 한참 못 미친다. 반대로 한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수준은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기업주들이 가져가는 몫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자세한 통계나 사실들은 《마르크스21》을 참고하기 바란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기업주·부자

들의 부담을 늘리는 ‘정의로운’ 복지 대안과 이를 위한 대중투쟁 건설의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낡은 것으로 취급하는 홍 위원은 단지 ‘혁명적’ 대안에 등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 추구에서도 뒷걸음치는 것이다.

복지를 늘리려면 노동자들에게 세금과 보험료를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낡은 우파들의 논법이다. 따라서 정부 관료들이 “건강보험 하나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홍 위원의 주장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거꾸로 그것은 이 요구가 지배자들이 큰 부담 없이 수용 가능할 만큼, 급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무상의료 아니다”는 실토

홍 위원의 조야한 계급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계급이 “끊임없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 사회적 부담에 참여해야 계급적 관점이 발생하고 확대된다. 세율이 높을수록 그의 사회연대 공헌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노동자일수록 계급의식과 연대의식이 높아진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소득이 워낙 적어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계급적 관점 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개념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계급은 머릿속 생각이나 의식 수준 따위와 관계 없이 착취 관계라는 물질 토대에서 비롯한다.

물론 노동자들의 의식이 대단히 불균등하고 심지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뒤죽박죽이기 십상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홍 위원이 말하는 ‘세금 많이 내기’가 아니다.

세금과 계급에 대한 홍 위원의 논리는 조세제도의 근본적 불평등을 지적하기는커녕 아예 조세제도를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찬양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말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필요에 따라’ 급여를 받는 아름다운 제도인 것이다.”(《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220쪽) 엄청난 과장이다. 무슨 공산주의 사회가 되더라도 한 것일까?

마지막으로 홍 위원은 민주노동당의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를 캠페인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무상의료가 아니다. 건보료를 더 내자는 것이 어떻게 무상의료인가? 완벽한 무상의료가 실현되려면 ‘병원 국유화!’를 주장해야 맞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더 내자는 것은 무상의료도 아니고 병원 국유화 같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도 보험료만 올리면 무상의료 수준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그동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사실 공공의료기관 확충(병원 국유화)은 무상의료와 함께 지난 20년 넘게 진보진영의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

홍 위원은 결국 진보진영이 기존의 개혁 요구에서 후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기왕에 타협할 거면 아예 투쟁을 포기하자는 식으로 말이다.

개혁을 위한 투쟁과 근본적 사회 변혁

홍 위원은 “계급투쟁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정파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홍 위원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본주의 타도만 외치며 현실의 개혁과 투쟁에는 무관심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 아니면 심각한 왜곡이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가장 일관되고 철저한 투사가 되려고 노력해 왔다.

복지국가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언제나 “복지국가를 옹호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정열을 쏟아 왔다.”(고세훈,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후마니타스)

이것은 홍 위원의 주장처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겉으로는 계속 계급투쟁 타령을 하면서 실제로는 소리없이 조금씩 전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 사회 변혁을 추구하면서 개혁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모순되거나 대립되지 않는다. 개혁이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폭넓게 단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개혁을 위한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조직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단지 부



두 책에는 장점도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자들이 세금만 더 내면 끝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세금의 원천인 부의 불공정한 분배, 더 거슬러 올라가 분배만이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들의 독점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개혁을 위한 투쟁과 혁명을 위한 투쟁이 그 시작부터 칼같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또 복지국가 건설 같은 수준의 사회 개혁을 이루려면 거의 혁명적 수준의 강력한 대중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유럽의 복지국가 건설 과정이 이를 잘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복지제도들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직후다.

게다가 호황이었던 당시와 달리 오

늘날처럼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본가들이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려면 훨씬 강력한 투쟁이 벌어져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복지국가라는 과제를 성취하려면 개혁주의적 수단(노사정 협의나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 아니라 체제 전체를 뒤흔들 수준의 투쟁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다. 실제로 그런 투쟁이 벌어진다면 노동자들은 단지 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개혁에 멈추려고 할까? 그래야 할까?

20세기에 벌어진 여러 차례의 혁명적 상황을 돌켜 보면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혁명적 요구를 제시한 것이 아니었고 그런 투쟁이 자연스레 일정한 수준의 타협에서 끝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언제나 현실의 개혁을 위한 노동자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이런 투쟁들을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투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반대로 홍 위원이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등은 개혁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기는 커녕 노동자들이 “먼저 희생과 헌신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양보를 ‘사회연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말이다.

홍 위원은 노동자들이 먼저 양보하는 게 복지 확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 나라 노

동자들의 경험에 비춰 봐도 사실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보험료는 대폭 올랐지만 복지는 그에 비춰 아직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당장 IMF 시절만 떠올려 봐도 그렇다. 노동자들이 “희생과 헌신을 감행”한 금 모으기는 어떻게 됐는가. 노동자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공적자금을 다 쓰러져 가는 기업들에 쏟아 부어서 기업주들이 “감동” 받았나?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이런 식(노동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방식)으로 자본가들이 양보한 것이 있거나 한가? 양보가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홍 위원의 주장이야말로 공상적이다. 자본가들은 개인적 선의와 관계 없이 시장 경쟁의 압력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홍 위원처럼 “적대 계급과 공존을 추구”하는 것은 타협이라기보다 ‘투항’에 가깝다.

애당초 타협이라는 말 자체가 그 밑에 이해관계 대립과 충돌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투쟁의 기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타협의 기술만 얘기하면 우리 편에 유리한 타협이 될 리가 없다. 무릎 꿇고 굴종하겠다는 노동자들에게 “감동”받아서 스스로 양보할 자본가는 없다. 당연히 이런 자발적 “희생과 헌신”은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힘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민전선의 역사적 경험에서 배운다 ③

스페인에서 노동자 혁명의 목을 졸라 버린 인민전선

지금 대다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대연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노동계급과 자본가 자유주의 세력의 체계적인 계급 협력을 가리키는 인민전선의 한국판이다.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인민전선은 모두 비극적이거나 우울한 결말을 맞이했다. 인민전선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 첫 연재(45호)와 프랑스 경험(47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스페인 인민전선 경험을 다룬다. 앞으로 미국, 칠레, 중국, 해방 정부의 조선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김문성
1936년, 프랑스에서 노동계급의 전진을 가로막았던 계급동맹 전략이 스페인에서는 노동자 혁명의 목을 직접 졸랐다. 20세기 초 스페인은 낡은 봉건적 잔재가 있었고 산업 발전이 미약했다. 봉건 영주와 귀족들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매달리지만 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신흥 산업 자본가들이 봉건 지배계급과 단절할 의지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저항에 나서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봉건 영주와 귀족들과 기꺼이 손을 잡았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낡은 왕정 체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스페인 노동계급은 20세기 초부터 혁명적 잠재력을 드러냈다. 1909년에는 모로코전쟁에 반대하는 파업이 일어났다. 1917년에는 러시아 혁명이 스페인에 저항의 불바람을 몰고 왔다. 총파업이 스페인 사회를 흔들었다. 이 운동은 3년 만에 진압되고 1923년 미겔 프리모 데 리베라의 군사독재가 시작됐다. 취약한 경제 때문에 독재는 오래가지 못하고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만다. 스페인 민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화정을 요구하며 저항에 나섰다. 알폰소 13세가 도망가고 1931년 공화국이 선포됐다. 신흥 자본가들이 권력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집권한 ‘공화주의자’들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 주지도,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지도 못했다. 여전히 봉건적 지배자 노릇을 하는 교회를 억압하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스페인은 1932년부터 경제 위기로 빠져들었다. 이 위기를 틈타 우익들은 더 우경화한 우익연합을 결성해 1933년에 집권했다. 우익 세력들은 3년간 시늉만 낸 개혁조차 뒤엎으려 했다. 스페인 북부 아스투리아스에서 광부들이 다이내마이트로 무장하고 봉기를 일으키며 저항했다. 저항은 갈수록 격렬해졌고 그러자 우익들 사이에선 더 극단적인 파시스트들이 성장했다. 결국 1936년 2월 선거에서 우익연합을 이기고자 인민전선이 결성됐다. 우익연합의 반동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공화주의 자본가들과 스페인 좌파들이 동맹을 맺은 것이다. 인민전선에는 중도우파 자본가당인 공화연합부터 개혁주의 정당인 사회당(PSOE)과 이 당과 연계된 노동총동맹(UGT), 그리고 극좌파인 공산당과 마르크스주의통일노동자당(POUM)이 모두 참여했다. 그러나 우익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계급을 뛰어 넘어 구성된 연합체가 진정으로 우익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곧 드러나기 시작했다.
반파시즘 투쟁의 동학
인민전선 내각의 자본가 장관들은 온건한 개혁 조치조차 우익과 기업주들이 반발하면 뒤로 물러섰다. 연합의 유지를 위해 좌파 정당들과 장관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을 얻은 우익 군부와 봉건적 교회, 왕정 복고파와 파시스트들은 마침내 7월 17일에 프랑코가 이끄는 군사쿠데타를 시작했다. 인민전선 정부는 불법 쿠데타를 두고 우왕좌왕하기만 했다. 정부의 확신 없는 태도는 쿠데타 모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군부와 지방정부들을 동요시켰다.



작가 조지 오웰은 바르셀로나에서 만난 노동자들이 "평등의 공기 속에서 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1937년 인민전선 정부가 바르셀로나의 노동자 권력을 분쇄했을 때, 사실상 혁명은 패배로 기울었다.

자본가들도 갈수록 프랑코 독재를 통해 스페인 자본주의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낫다는 방향으로 이끌리기 시작했다. 공장과 토지의 옛 주인들은 도망가거나, 소유권은 보장해 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파시스트 편에 섰다. 결국 단숨에 수도 마드리드를 점령하려던 프랑코의 파시스트 군대를 막아선 것은 인민전선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와 무토지 농민들이었다. 카탈루냐, 발렌시아 등 지역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저항을 조직했다. 저항에 나선 노동자와 농민 들은 도시와 공장, 토지를 자주적으로 통제 · 관리

하기 시작했다. 기층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반파시즘 투쟁은 스페인에서 새로운 권력 수립, 즉 노동자 혁명을 일정에 올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산당의 계급동맹 정책이 문제가 됐다. 공산당은 자본가계급과 동맹해서 인민전선 정부를 유지한다는 목적에 매달리며 오히려 노동자 혁명의 가능성을 가라앉히는 구실을 했다. 공산당은 ‘혁명’은 나중이다’ 하며 노동자 · 농민에게 공장 · 토지 점거와 자주관리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자본가들과 동맹을 유지하려, 적당한 수준에서 투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재앙적 정책은 혁명적 열기로 달아오르던 스페인 노동자 · 농민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김을 빼는 구실을 했다. 결국 기층의 활력이 꺾이자 인민전선 정부는 더 노골적으로 혁명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좌파 정당들은 불법화되고 그 지도자들은 처형당하거나 살해됐다. 스페인 혁명의 패배는 세계사의 줄기를 바꾸는 패배였다. 1939년 스페인에서 파시스트 군사 반란이 성공하자마자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제2차세계대전의 도화선을 당겼다. 스페인에서는 인민전선 정부 지지자를 포함해 수십만 명이 학살됐고, 노동계급 투사 한 세대가 절멸했다.

혁명이냐, 파시즘이냐

노동자들이 너무 급진적으로 행동해서 반파시즘 진영이 분열하고 자본가들이 도망간 것이 패인은 아닐까? 반파시즘 투쟁이 혁명으로 발전한 과정을 살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난다. 파시스트 군대는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나서 정규군에게 무기를 넘겨 받고 지역을 통제하며 저항한 곳에서 패배했다. 내전 초기, 카탈루냐 지방정부 수장 콤파니스는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든 것이 여러분 수중에 있습니다. ... 지금의 나와 내 충성심을 믿어 주십시오” 하고 말해야 했다. 반대로 인민전선 정부는 처음부터 동요했다. 노동자들에게 무기 지급하기를 거부하다가 내각이 교체되기도 했다. 자본가들은 스스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보다 차라리 파시스트를 선호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의 지지가 프랑코 진영으로 넘어가자 인민전선 정부는 대변할 사회 세력이 없는 껍데기가 됐다. 좌파는 인민전선 정부에 들어가지 말고 각 지역 혁명위원회들을 연결망

으로 하는 전국적 대안 권력을 창출해야 했다. 인민전선 정부를 위해 혁명적 투쟁을 자제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었다. 노동자와 농민에게 이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전쟁이 사회혁명이었기 때문이다. 옛 주인들이 떠난 곳에서 이들은 공장 과 토지를 점수하고 모든 공공서비스와 치안을 통제했다. 이제 선택지는 혁명이냐, 파시즘이냐 둘 뿐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공산당과 인민전선 정부는 노동자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투쟁의 동력인 사회혁명의 열망을 제거하려 했다. 주요 책략은 좌파를 인민전선 정부에 포함시켜 발목잡고 뒤통수치는 것이었다. 혁명의 위력이 가장 강했던 카탈루냐에서 이베리아아나키스트연합(FAI)과 POUM은 지역관 인민전선 정부에 들어갔다가 그런 꼴을 당했다. 인민전선 정부는 POUM을 중앙정부에서 쫓아냈고 얼마 안 가 불법화한 뒤

그 지도자 안드레스 닌을 살해했다. 배신의 마지막 희생자는 공산당 자신이었다. 한편, 프랑코 진영의 주력 부대는 모로코 주둔군과 모로코인 용병이었기 때문에 인민전선 정부가 모로코 독립을 선언한다면 전세가 달라질 수 있었다. 그러나 스페인령 모로코의 해방은 프랑스령 모로코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프랑스 자본주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인민전선 정부와 소련의 판단으로 이 해방적 조치는 거부됐다. 스페인 인민전선 정부가 이렇게 행동했는데도 ‘반파시즘’을 자처하던 프랑스와 영국, 미국의 자본가들은 결코 스페인의 노동자들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 압력에 굴복해 프랑스 인민전선 정부도 스페인 인민전선 정부의 군사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이렇게 인민전선 정책 때문에 스페인 노동자들의 손발이 묶여 있는 사이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부는 최신 무기와 병사 수만 명을 프랑코에게 지원했다.

스탈린과 인민전선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노선에서 핵심은 혁명의 국제적 확산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모국’인 소련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었다. 코민테른은 이를 위해 각국 공산당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특히 나치 독일의 위협이 현실이 되자 히틀러를 막으려고 서방과 맺는 동맹에 집착한 스탈린은 서방 자본가들에게 혁

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심지어 스탈린은 스페인 내전 초기인 1936년 사회당 소속인 수상 카바예로에게 사유재산 보호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스탈린은 인민전선 정부를 위해 혁명을 교살하는 구실을 공산당에게 맡겼다. 공산당은 반파시즘 투쟁이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는데, 막

상 인민전선 정부는 국내의 자본가계급에게 충성했다. 그리고 그 국제 자본가들과 이른바 ‘민주’ 진영 정부들은 볼셰비즘의 공포보다 파시즘의 승리를 보는 게 낫다고 결정했다. 요컨대, 인민전선 전략은 애초부터 그 목표가 체제 위기를 혁명으로 해결할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억제하는 데 있었다.



POUM
이 당의 지도자 안드레스 닌은 트로츠키가 이끄는 국제 좌익반대파 소속이었으나 결별하면서 지지자들과 POUM을 결성했다. 이 당은 스탈린의 반혁명 정책에는 반대했으나 혁명적 경향과 개혁주의 경향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투쟁의 기회를 놓쳤다.

FAI
무정부주의자들의 정치단체로 1백만 명이 넘는 전국노동동맹(CNT)을 지도했다. 충실으로 혁명을 지지했으며 가장 전투적인 반파시즘 투사들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대안 권력을 세우는 일에 기권해 인민전선 정부를 대체할 정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월 17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현대차 비정규직

신차 투입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를 막아내야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열한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어기고 지금까지 무려 4백여 명을 업무 방해·집시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손해배상 1백62억 원을 청구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조합원 90명의 통장을 가압류했으며, 징계 시도도 지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상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해 울산 16명, 전주 다섯 명, 총 21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지는 꺾이지 않았다. 3공장 광대옥 대의원은 현장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2006년 투쟁에 견줘 이번 투쟁은 확실히 다르다. 사측의 징계 시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징계를 강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측도 자칫 잘못 도발했다가 투쟁에 기름을 붓지는 않을까 노심조사를 하는 게 느껴진다. 우리는 2라운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2라운드 투쟁이다. 4공장 이용하 대의원은 “조직을 재정비해 본격적인 2라운드 투쟁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논의 끝에 ‘1월 중순까지 4대 요구에 대한 사측의 진전만 안 나오지 않으면 투쟁 강도를 높인다’고 결정했다.

또 금속노조·현대차지부·비정규직 3지회가 참가하는 ‘공동 투쟁단’도 제안했다.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 지도부가 1라운드 투쟁의 오명을 씻으려면, 비정규직지회의 이런 제안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2라운드 투쟁을 위해서는 현안 문제인 신차 투입에 따른 비정규직 우선 해고부터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막아셔야 한다.

사측은 최근 울산 3공장에서 신차 출시를 핑계로 비조합원인 단기 계약직 57명을 해고했다. 그런데 이 맨아워(M/H) 협상 과정에서 협상권을 쥐고 있는 3공장 정규직 김기수 대의원 대표가 사측과 이것을 합의해 버렸다.

3공장의 한 정규직 조합원은 착잡해



지난해 12월23일 출근투쟁 사측의 보복 탄압 속에서도 2라운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들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측은 신차를 투입할 때마다 작업·특근을 줄인다고 협박하며 인력을 감축해 왔다. 사업부 대표는 이런 협박에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투항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볼 면목이 없다.”

3공장 정규직 대의원도 불만을 토로했다.

“사업부 대표가 회사와 담판 짓고 온다며 올라가더니 30분 만에 57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왔다. 그리고는 곧바로 망치를 두드리고 나가버렸다.”

맨아워(M/H)협상 - 고용 불안의 칼날

신차 투입에 따른 정규직 전환 배치와 비정규직 우선 해고는 단지 3공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1·2·5 공장에서도 이것이 예정돼 있다.

물론,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기력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1공장 정규직사업부는 대의원회 긴급 간담회를 열어 ‘원·하청 총고용 보장’, ‘노동강도 강화 반대’ 등의 공식 방침을 결정했다. 현장조직 중 금속민투위, 민노회, 민주현장, 평의회도 공동으로 3공장 김기수 대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냈다.

지난해 9월 1공장 정규직 조합원들은

맨아워 협상 과정에서 투쟁을 통해 3백 4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저지하고 오히려 인력을 20여 명 증원한 바 있다.

이런 1공장의 경험은 다른 공장으로 확대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 강화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머지 않아 해고의 화살은 정규직의 심장을 겨눌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우선 해고에 반대해 함께 싸워야 한다. 비정규직지회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한시 하청 노동자들의 해고에 반대하며 그들을 노조로 조직해야 한다.

이 같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이야말로 2라운드 투쟁을 준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1공장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경험은 25일간의 1라운드 투쟁에서도 빛을 발한 바 있다.

김기선

맨아워(M/H)
숙련 노동자가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작업분량이란 뜻. 이것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과 노동강도, 인력 규모가 결정되므로 노동조합은 기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을 막고 노사협상으로 정하려고 한다.

GM대우



지난해 12월 29일 GM대우 부평 인근에서 행진하고 있는 금속노조·GM대우 정규직 지부 조합원들. 이같은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GM대우 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이준삼 조합원이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한 달 넘게 고공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 ‘해고자 복직·불법 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상 9미터 높이의 GM대우 정문 아치 위에 올랐다.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지부장(전 GM대우 비정규직지회장)은 “두 동지 모두 저체온증과 동상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춥다고 내려를 생각이었으면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두 동지는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GM대우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비정규직 지회는 우리와 무관하고 교섭대상도 아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러나 얼마 전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23일 창원지방법원은 “GM대우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로부터 사내하청 근로자를 파견 받아 창원공장 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것은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하고, GM대우 전 사장 데이비드 닉 라일리(현 GM유럽 사장 겸 오펔 사장)에게 7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대우 부지부장은 이번 판결로 투쟁의 정당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11월 말에 노동부가 GM대우 등 자동차·철강 업종에서 불법 파견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객관적으로 조사했다며 큰소리 쳤지만, 군색한 처지가 뻔했습니다.”

2008년~09년 경제 위기가 몰아치자 GM대우 사측은 약 1천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축소했다.

정규직 업무 라인을 대거 도급화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용용 휴지처럼 채용·대량 해고하기를 반복했다.

2010년 들어 경제 위기 이전 상황으로 판매 실적이 개선됐지만, 사측은 계속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했다.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GM대우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6퍼

센트 증가했고, 만기가 돌아온 산업은행 차입금 1조 2천억 원도 모두 상환하는 등 재무 상황도 개선됐는데 말이다.

GM대우는 2006년부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2백3억 원과 주민세 20억 원을 면제받는 등 세금을 2백54억 원이나 감면받았다.

GM대우 사측은 결코 돈이 없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한 사람을 정규직화하는 데 1년에 1천 6백80만 원이 든다는데, 그동안 GM대우가 받은 혜택만 합쳐도 대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도 남는다.

이 때문에 지역의 단체들도 일제히 혜택만 챙기고 비정규직을 해고한 GM대우 사측을 규탄하고 있다.

원·하청 연대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로 계속되고 있다. 6개 현장조직이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고, 각 부서별·그룹별로 투쟁 지원금도 모아서 보내고 있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지지에 다시금 힘을 연습니다. 한 달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데도 삿대질하는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이 투쟁에 현장조합원들이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맘 속 깊이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측은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공장 입구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감시하려고 CCTV 두대를 설치했고, 직·반장들이 면담과 협박도 시작했다.

‘신차 출시하고 생산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비정규직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의 분열 책략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이대우 부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직 지부는 사측의 교섭을 촉구하고 집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청 공동투쟁이 좀더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확대간부 수준을 넘어 현장조합원들의 연대를 늘려야 합니다.”

박성환

전북 버스 파업

“수십 년 응어리진 한이 풀릴 때까지 파업한다”

전북 지역 버스 회사 일곱 곳의 노동자들이 해를 넘겨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말 결의대회에는 2차 파업에 돌입한 광주 급고고속 조합원들까지 함께 해 힘을 실었다. 야비하게도 경찰이 새벽 4시에 차량 다섯 대를 병력과 용역강패, 대체인력 수십 명을 동원해 파업 작업장 중 하나인 제일여객에 들이닥쳤지만, 일곱 곳의 노동자들이 모두 달려와 이들을 보기 좋게 물리쳤다.

그러나 악랄한 사측은 ‘선운행 후교섭’을 고수하며, 파업 파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사측은 현재까지 16명을 해고했고, 5개 회사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경찰의 비호 하에 여러 차례 용역강패와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시도했다.

사측은 관변 단체들을 동원해 파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언론을 통해 월 1백40만~1백60만 원을 받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북버스노동자 승리를 위한 집회

저임금 노동자들을 월 3백만 원을 받는 “고임금” 노동자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사측이 근로기준법상 사라진 월차 수당 수십만 원을 하위로 부풀려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챙겨 왔는데도 전주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전북도지사 김완주가 버스 사업주 두 명을 포함해 지역

자본가들한테서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폭로됐다. 왜 지역 정치인들이 사측을 비호하는지 보여 준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제일여객 최병윤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투쟁은 운전수들의 ‘한풀이’다. 그 한이 하루아침에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수십 년 응어리진 한이 풀려야만 파업을 풀 것이다.”

이런 노동자들의 투지는 더 큰 연대를 촉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월 8일 전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버스노조 민주화 쟁취를 위한 전북지역 투쟁본부 김종인 본부장은 “8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전국화된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저들의 ‘선운행 후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분명한 양보가 있을 때까지 투쟁과 연대를 지속해야 한다.

이병무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저지 투쟁

투쟁 수위를 높이며 비정규직과도 연대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이 기간을 연장하며 희망퇴직을 종용했지만 희망퇴직을 신청한 노동자들은 50여 명밖에 안 된다. 노동자들 대부분이 '절망 퇴직'이 아니라 '희망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실제로 휴업자들을 포함해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쌓여 온 분노를 터뜨리며 맹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장과 부산시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기세를 본 사측은 한 발 물러서 교섭을 제안하며, 1월 5일 예정했던 해고 통보를 연기했다. 교섭으로 투쟁의 김을 빼고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그러나 이미 2월에 "구조조정 중단"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버린 사측이 쉽게 물러설 것이라고 보는 조합원들은 별로 없다.

사측은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하려 한다. 국내 조선소 중 유일하게 연구소까지 해외로 이전했고, 설계 부문에 이어 품질관리부서도 분사화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필리핀 제2조선소 건립 계획도 발표했다. 핵심 부서만 남기고,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려 "값싼"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으로 2003년에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는 게 저들의 진정한 속내다.

한진중공업 특수선에서 일하는 이봉희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측이 일을 전부 하청업체에 외주



1월 5일 영남권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수십 년간 회사를 먹여 살려 온 이들이 왜 일터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를 주고 조합원들을 휴직시켜 버리고 있으니 문제예요. 다른 조선소들은 물량을 많이 주주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요? 이 기회에 노조를 완전히 죽이려는 것이죠."

연골 파열

상선에서 일하는 박희찬 조합원은 "사측이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주주를 몰아 쥐 이득을 챙기고, 이를 통해 영도조선소 구조조정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빼 빠지게 번 돈으로 수빅조선소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우리에게도 일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봉희 조합원은 분통을 터뜨렸다.

"내가 저런 놈들(사측)을 위해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나 싶어 억울해 죽겠어요. 쪼그려 앉아서 용접을 하면 퇴행성 관절이나 연골 파열이 와요. 그렇게 일해 온 대가가 이천가요?"

"임금이 2년째 동결됐어요. 40~50만 원에 달하는 고정 연장근무도 사라졌죠. 휴업으로 월급도 줄고요.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사람들이 천치죠. 그런데 저놈들은 주식배당이다 하면서 돈 잔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통이 터져요."

지역의 시민대책위는 이런 노동자들

을 지지해 홍보전, 촛불 문화제 등을 이어 가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 투쟁 때보다 더 신속하게 결성됐고, 참가 범위도 더 넓다.

물론, 대책위에 민주당까지 가세하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 '노사 간 중재' 등의 요구가 부각되는 것은 아쉽다. 시민대책위는 '중재'가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 고 통전가를 비판하고, 투쟁을 강화하는 데 활동의 중점을 뒀다. 민주당 등 야당들이 KEC·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서 한 '중재'는 점거 해제를 종용하며 투쟁의 사기를 꺾는 일이었다.

특히 사측이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

고 하는 마당에, 노조는 더 강경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 공장 안 농성으로 주요 공정을 중단시키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점거파업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점거파업은 생산에 가장 직접적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연대의 초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2003년 김주익 열사 투쟁 때처럼 공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끌어들이어야 한다.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과의 단결은 당시 파업에 실질적 힘이 됐다.

한 하청 노동자는 2003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김주익 열사가 크레인에 올라갔을 때 노조 간부들이 공장 앞에서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때 동참한 하청 노동자가 역수로 많았습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회 "사측은 순차적으로 정규직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더불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도 지역 연대파업을 포함해 더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지부 연대집회, 영남권 노동자대회 등을 이어가며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투쟁 수위를 높일 때, 이런 연대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조명지

외환은행 매각 저지 투쟁

‘먹튀 자본’ 론스타의 지분을 몰수해야 한다

외환은행 노동자들이 투기자본 배불리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하나금융지회사의 인수합병 시도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1인 시위 등 대국민 홍보, 금융위 앞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금융 인수 반대 1백만 인 서명운동에는 80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하나금융의 인수 시도가 지금 외환은행의 소유자인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도울 뿐이라는 외환은행 노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대가로 론스타에게 약 4조 7천억 원을 주



지난해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앞 집회

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허위라는 게 밝혀진 것이다.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주고, 연말 배당액을 보장해 주는 등 실제 가격은 6조 원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법과 특혜 의혹을 받아 왔다.

최근 임명된 금융위원장 김석동은 당시 론스타의 인수 자격 심사를 날림으로 하고 "생각보다 빨리 처리돼서 '도장값'이 비싸야 될 텐데" 하고 말한 바 있다.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게 해 줬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터러운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의 인수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심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를 지지한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 하나금융의 인수 시도는 일단 무산될 것이다.

그러나 '먹고 튀려는' 론스타에게는 별 타격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론스타는 이미 대량 해고 등으로 주가를 올려 주식 배당액 약 1조 원을 챙겼고, 보유 주식은 제값 받고 팔면 그만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새 주인이 또 다른 투기자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전히 론스타 지분을 몰수하는 주장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외환은행 매각 책임자인 변양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론스타 자체가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 무엇보다 비리 공직자에게 "선의의 정책적 판단" 운운하는 엉터리 판결을 순순히 인정해선 안 된다.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론스타게이트, 그 뒤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정리해고, 탈세와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모든 악행들을 다시 조사하고 단죄해야 한다.

론스타의 '먹튀' 단죄와 외환은행의 국유화를 요구하면서 싸워야 한다.

김문성

영화평

〈윈터스 본〉 데브라 그라닉 감독

미국 사회의 감춰진 모습을 보여 주는 영화



〈윈터스 본〉은 미주리 주의 농촌 산악에 자리 잡은 메타암페타민 가루[마약]의 일종으로 사용된다] 공장 지대를 배경으로 한 '농촌' 필름 누아르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황량한 오자크 산맥 지대를 따라 펼쳐지며,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영화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주인공인 리는 17세 소녀다. 미국 미주리 주의 농촌 마을에 사는 그녀는 가족을 유지하는 대들보이기도 하다.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한 리는 매우 단

호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캐릭터다.

리의 어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리가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

리의 가족은 돈이 항상 부족해 이웃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그들은 수백만 명의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주택 1백만 채가 압류됐고 압류되는 주택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리의 경우에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는 은행이 아니라 보석 석방 보증인이다.

리의 아버지는 '마약'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그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집을 저당잡아 보석 석방된다. 그러나 그는 곧 실종된다. 리의 가족은 아버지가 법정에서 출두하지 않으면 자기 집에서 내쫓길 위험에 처한다.

가족을 구하려고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리의 노력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다.

카메라는 버려진 공산품들—종고차, 트랙터, 가구와 집 앞에 쌓인 잡동사니들—로 뒤덮인 황량한 풍경을 담는다.

리는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자신의 질

문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나중에 어떤 이는 폭력으로 답한다.

절망에 빠진 리는 군대에 입대해 가족을 구하려 하지만 거부당한다. 만약에 그녀가 입대했다면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돼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구실을 해야 했을 것이다.

절반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고 절반은 미스터리물로서 미국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보여 주는 〈윈터스 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관객은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오늘날 노동계급은 더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흔히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노동계급의 힘이 크게 약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사회를 개혁할 새로운 주체를 찾으려는 시도와 맞물리곤 한다.

촛불운동 이후 많은 지식인들은 미조직 청년 등을 새로운 ‘파워’로 추켜세웠고, 근래엔 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당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체로 이런 논의들의 근저에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이런 불신을 뒷받침하는 여러 논거들이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흔한 논리 중 하나는 세계가 ‘탈산업화’ 시대로 접어들어 전통적 산업 노동계급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논자 중 한 명인 이찬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탈산업화 시대에 …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제조업[의] … 반복적 노동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은 사양화하지 않았다. 유럽의 일부 선진국에서 제조업 비중은 줄었지만, 중국·인도 등에서 제조업은 크게 성장했고 미국에서도 제조업 노동자의 규모는 1998년 현재 1950년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최근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95년 23.5퍼센트에서 2008년 17.3퍼센트로 낮아졌다. 그러나 오히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15.9퍼센트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9월엔 27.6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힘은 여전히 지배계급 전체에게 위협적이다. 보수 언론들이 언제나 급속노조나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파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노동계급 개념을 특정 산업 노동자들로 국한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제조업 육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서비스·언론·정보통신 등 수많은 업종의 노동자들과 사무직 노동자들도 노동계급에 해당한다.

과거에 비해 서비스업 노동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은 노동계급의 소멸이 아니라 변화를 보여 줄 뿐이다. 이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처지는 제조업 노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비스업에 포함된 철도·버스 등 운수 노동자들, 교사·공무원·간호사 등 공공서비스 노동자들, 청소·유통업 노동자들도 매일매일 반복적 업무와 직장 상사의 다툼에 시달리며 착취와 억압을

겪는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개발된 업무 평가 방식은 흔히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게다가 이들은 제조업 노동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국가나 개별 기업주에게 맞선다. 한국의 공기업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은 80퍼센트에 육박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54.9퍼센트와 교사 노동자의 20.6퍼센트도 노조로 조직돼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투쟁을 지속해 왔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엔 철도·발전·지하철 등 공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고, 2000년대 중반엔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연가 파업을 벌였다. 2007년엔 유통업체 이랜드 노동자들이 매장을 점거하고 싸웠고, 최근엔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과 점거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고용 불안

둘째, 또 하나의 주요 논리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 불안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유목 노동의 증가”로 노동자들이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수준이 매우 높을 때도 투쟁에 나서곤 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상시적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힘이 없다고 여겼지만, 바로 얼마 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편견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이들은 “생산라인을 끊어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에 타격”을 줬다. 2003년과 2008년엔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물류를 마비시키기도 했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임시직 일자리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아니고,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한국에서도 비정규직의 20퍼센트 이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시 고용된 상용직이다. 일부의 과장과는 달리, 안정된 숙련 노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주들은 비정규직을 무한정 늘릴 수만은 없는 처지다.

셋째, 또 다른 논리는 자본의 해외이전이 쉬워져 노동자들이 기업주를 통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금융 투기꾼들이 엄청난 자금을 순식간에 국경선 밖으로 옮기고 있는 지금, 이것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생산 설비를 이전하는 것은 돈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자본이 타지에서 새로운 협력자들을 찾고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도, 기계나 설비를 들여놓고 충분히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본의 해외 이전 논의가 만연해 있는 미국에서도 생산적 해외투자는 전체 투자의 8퍼센트 미만에 그친다.

이 모든 점들을 볼 때, 노동계급의 힘이 약해졌거나 사멸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생산성 향상 덕분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지난해 한국에서 경주의 자동차 부품공장들에서 파업이 벌어졌을 때도, 이에 타격을 입은 현대차의 부사장이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생산을 멈추면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인 이윤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전 세계 부를 창조하는 노동자들은 체제의 이윤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할 힘을 가졌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의 세력으로서 노동계급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자”들이다.

더욱이 오늘날 노동자들의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임금 노동자이고, 나머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농업 인구의 절반도 모종의 임금 노동을 병행하고 있다.

진정한 문제는 이런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다.

계급 의식

일상적 시기에 노동자들의 의식은 상당히 불균등하고, 그중 다수는 심지어 보수적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는 한 부문의 투쟁이나 지배계급의 심각한 위기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하면서 투쟁이 솟구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시기에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존재에 눈뜨게 된다.

한국에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1960~70년 프랑스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확산한 노동자 투쟁 때도 그런 파고가 일어났다. 지금 유럽의 노동자 투쟁도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보여 주는 징표다.

이럴 때 투쟁을 발전시켜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려면 노동계급의 강력한 힘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 혁명적 조직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아반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조직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

박설

논설

필요한 것은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 단결 전선이다

이명박은 신년연설에서 “올해 국정운영의 두 축은 안보와 경제”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올해도 한반도 주변의 긴장과 ‘안보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드리운 긴장의 먹구름이 사라지길 바란다. 그리고 최근에는 긴장 해소 조짐도 희미하게 나타나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방북했던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 빌 리처드슨은 “아직 언제라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엄청난 긴장, 엄청난 불신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긴장의 배경에는 이 지역에서 패권을 위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려는 미 제국주의의 영향력 강화 시도가 있다.

이미 미국 제국주의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패권을 유지하려 하면서 중동을 끔찍한 생지옥으로 만들어 왔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가 지난해 가을 아세안 10개국 정상들 앞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불안감을 더욱 부추겨 왔다.

오바마와 이명박이 옥죄수록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더 매달리게 되고, 오바마와 이명박은 그것을 빌미로 다시 긴장을 더한층 고조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이 그대로 있는 한 이 지역에서 대화는 또 다른 충돌의 전주곡일 수 있다.

따라서 오바마와 이명박에 맞서는 반제국주의 운동 건설은 올해에도 진보진영 투쟁의 한 축이 돼야 한다.

이명박이 “올해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라며 국정운영의 또 다른 축으로 ‘경제’를 잡은 것도 불길하다. 부자 감세 등 재벌들에 대한 퍼 주기로 세계 경제 위기에 대처해 온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더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예산안 날치기와 새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복지를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공격하겠다는 기본 방향이 드러났다.

신년연설에서도 이명박은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사람들이 정의에 목말라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지긋지긋해하는 상황에서 이명박의 이런 정책 방향은 지지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 후 시작된 이 정부의 레임덕은 갈수록 가속화할 것이다. 벌써 시작된 박근혜, 김문수, 오세훈 등의 대권 레이스도 이명박의 레임덕을 더 부추길 것이다.

한나라당 남경필은 “일각에서는 친이계는 이미 무너졌다. 없다. 이미 해체된 지 오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한다. 정두언도 “한나라당은 더 나빠질 것이고 악재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미루고 덮어 왔던 일들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래서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양상훈은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는 북보다는 남(南)에서 먼저 현실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한다.

레짐 체인지

이명박 정부가 2010년의 마지막 날에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로 조중동을 선정하고 ‘회전문 개각’을 통해 최측근들을 전진배치한 것은 이런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일 것이다.

그러나 조중동 방송 시대의 개막은 기성 언론과 방송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더욱 부추기며 역풍을 날을 수 있다. 2008년 촛불 항쟁 때 조중동이 대중적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됐던 것을 떠올려 보라.

더구나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는 끊임없이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해 왔다. 한정된 광고 시장을 둘러싼 조중동의 생존 경쟁은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도 더 격화시킬 것이다.

친위 체제 구축도 마찬가지다. 집권 초 강부자 친위내각 구성은 촛불항쟁의 불쏘시개 중 하나였고, 지난해 영포게이트 파문은 친위체제 구축 과정에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조중동을 사업자로 선정한 종편 심사위원장 이병기는 민주당(순학규) 추천 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다가 MB팬을 거처 급기야 친박계로 변신했다. 이 때문에 언론 노조와 단체들은 “순학규 대표는 종편 사업자 결정의 조력자 역할을 해 버린 결과 앞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하라]”고 질타했다. 사실 민주당은 2009년 방송악법 통과 과정에서 일관되고 철저하게 그것을 막지 않았다.

이것은 이명박과 그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에서는 끊임없이 동요하고 타협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때문에 진보정당과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올해의 주요 과제를 2012년 총선과 대선 준비로 여기고, 나아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추진에 치중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들은 2012년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집권 프로젝트를 세워 두고 선거 논리에 빠져 있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뒀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근본에서 다를 바 없는 민주당과 계급연합을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정책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진보진영은 노동자 대중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정책을 저지하려 힘써야 하고,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진보대연합(노동자 공동전선)을 추진해야 한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2년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레프트21에서 만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1년(26개 호) 5만 원 | 2년(52개 호) 10만 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새해 벽두부터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한 홍익대학교

해고를 철회하고 임금을 인상하라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월 3일부터 학교 본관 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학교 당국이 새해 벽두부터 미화·경비·시설 노동자 1백 70여 명 전원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1월 2일, 새해 첫 출근을 한 시설 노동자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작업실에 출입할 수 없었고, 미화·경비 노동자들은 대기실과 경비실의 열쇠마저 빼앗겼다. 어떤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이 벌어진 대량해고였다.

대부분 50~60세의 고령인 노동자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곧바로 총장실로 향했고, 노동자들의 기세에 놀란 총장 장영태는 시무식도 못하고 꼬박 8시간 동안 총장실에 숨어 있었다. 아파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며 휠체어를 타고 쇼를 하던 장영태는 한시간 뒤 뛰어서 도망쳤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2일 공공노조 서울경인지부 홍익대학교분회를 출범하고, 고용 승계와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 왔다. 출범 초기부터 82퍼센트가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자들의 기세는 매우 높았다.

특히 대학 미화 노동자들의 잇따른 투쟁 승리가 이들의 사기를 고취시켰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동국대 등 많은 대학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됐고, 통쾌한 승리 소식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홍익대 당국은 이런 기세를 꺾으려고 전원 해고라는 조강수를 둔 것이다.

이 대학의 학생운동 기반이 취약해진 것도 한몫했다. 학교 당국에 협조적인 총학생회는 점거농성이 시작된 바로 다음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동조합이 비상식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했다'는 학교 당국의 주장을 맹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액은 겨우 시급 1천 원 가량밖

에 되지 않는 데다, 하루 3백 원 꼴로 지급하던 식비를 현실화하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다.

더구나 지난 몇 해간 홍익대학교의 등록금은 가파르게 치솟았고, 지난해 인문대학 등록금은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그러는 동안 재단 적립금도 4천8백억 원을 쌓아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다. 따라서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 대학 재단에 맞서야 한다.

다행히 일부 학생들이 인상적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징계협박과, 소모임 해체를 협박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농성에 함께하고 있는 홍익대 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결의했다. 다함께, 학생행진, 소모임 '다락방' 등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도 조직하기로 했다.

이들이 힘을 모아 연대를 건설한다면 충분히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언론조차 미화 노동자들의 투쟁을 동정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근에 있는 연세대·이화여대·명지대 총학생회들도 연대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고, 타 대학 미화 노동자들의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는 1월 11일 전 조합원이 단축 근무를 하고 홍익대학교로 집결해 대규모 연대집회를 갖기로 했다.

탄탄한 우호적 여론에 이런 연대 투쟁을 잘 결합시킨다면 수년째 이어져 온 미화 노동자들의 승승장구는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박용석



사단법인 노동자학생연대

한 달 임금 75만 원, 한 달 식대 9천 원에 불과한 홍익대 미화·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확대되고 있다.

동국대 미화 노동자

노동자·학생 연대로 값진 승리를 쟁취하다

1월 2일 동국대학교 미화 노동자들이 전원 고용 승계를 쟁취했다. 닷새 파업과 점거농성으로 얻은 성과다. 동국대 미화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동조합을 결성해 최저임금과 주5일제 보장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동국대 당국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용역업체를 계약해지했다. 계약해지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의미했다. 그러나 탄압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지만 높였다.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것을 지키라는데 대화조차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우리를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12월 29일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사흘째인 12월 31일 60대 여성조

함원의 삭발식을 보며 노동자들은 "차라리 죽여라" 하고 울부짖었다.

결국 새로운 용역업체는 "죽어도 농성을 풀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결기를 보며 계약을 포기했다. 당황한 동국대 당국은 끝내 전원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만 했다. 노동자들이 통쾌하게 승리한 것이다.

이번 승리에는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가 주요했다. 노동자들의 얘기처럼, 노조 건설부터 파업과 농성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고무적이게도 전교생의 71퍼센트가 넘는 9천3백여 명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에 참가했다.

이런 공감을 지지와 연대로 이끌어내는 데는 학생 활동가들의 노력이 핵심적 구실을 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와 학내

진보적인 단체들은 "미화 노동자도 학내 구성원"이며, "실제 사용자인 동국대가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학생 활동가들은 등교 홍보전, 1인 시위, 학내 연대집회 개최, 점거농성 동참 등 진정으로 '아름다운 연대'가 무엇인지 보여 줬다.

동국대 당국은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가 두려웠던지, 노동자들의 학내 집회와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한다면, 학과 구조조정 중단,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요구에나 답하라고 반박했다.

학생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의 승리를 보면서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유병규

2011년 1월 25일(화) - 27일(목)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서관) 132호

주최 : 대학생다함께, 진보 언론(레프트21)

새내기 맞이 포럼
미니
맞시름2011

대학생, 무엇을 할 것인가?

www.marxism.or.kr/mini2011

* 재학생 참가도 환영합니다.

11:00 - 11:20

[개막식]

위기의 시대 -

대학생, 무엇을 할 것인가?

개막식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11:20 - 12:50

신자유주의와 대학, 학생운동

김지윤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일명 '고대녀'

1:50 - 3:20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과

노동운동의 미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3:40 - 6:40

[영화 상영]

마이클 무어, <자본주의의 러브 스토리>

영화 상영 후 조별 토론이 진행됩니다.

6:00 - 7:30

베네수엘라 -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어디로?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인문/사회과학 도서를

할인 판매하는 Book7씨

"대학생, 무엇을 읽을 것인가?"

10:00 - 11:30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장호중 기후정의 활동가, <레프트21> 기자

11:50 - 1:20

마르크스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정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2:20 - 3:50

연평도 상호 포격, 계속되는 군사 훈련...

한반도는 왜 이토록 불안정할까?

김하영 <마르크스21> 공동 편집자,

<국제주의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4:10 - 5:40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오늘의 세계

- 새로운 제국주의

김용욱 <레프트21> 국제 문제 담당 기자,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 역자

6:00 - 7:30

베네수엘라 -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어디로?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11:00 - 12:30

여성 차별은 왜

오늘날에도 계속될까?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1:30 - 3:00

북한은 진짜 사회주의인가?

김하영 <마르크스21> 공동 편집자,

<3대 권력 세습 -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저자

3:20 - 4:50

마르크스는

오늘날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최일봉 <마르크스21> 공동 편집자,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저자

5:10 - 6:40

신자유주의의 대안 -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강동훈 <레프트21> 경제 담당 기자

6:40 - 7:00

갈무리

참가 신청 및 문의

010-5678-8630 (문자 전용*)

student@altogether.or.kr

참가비

하루 8,000 / 전일 19,000

새내기 할인!

하루 5,000 / 전일 11,000